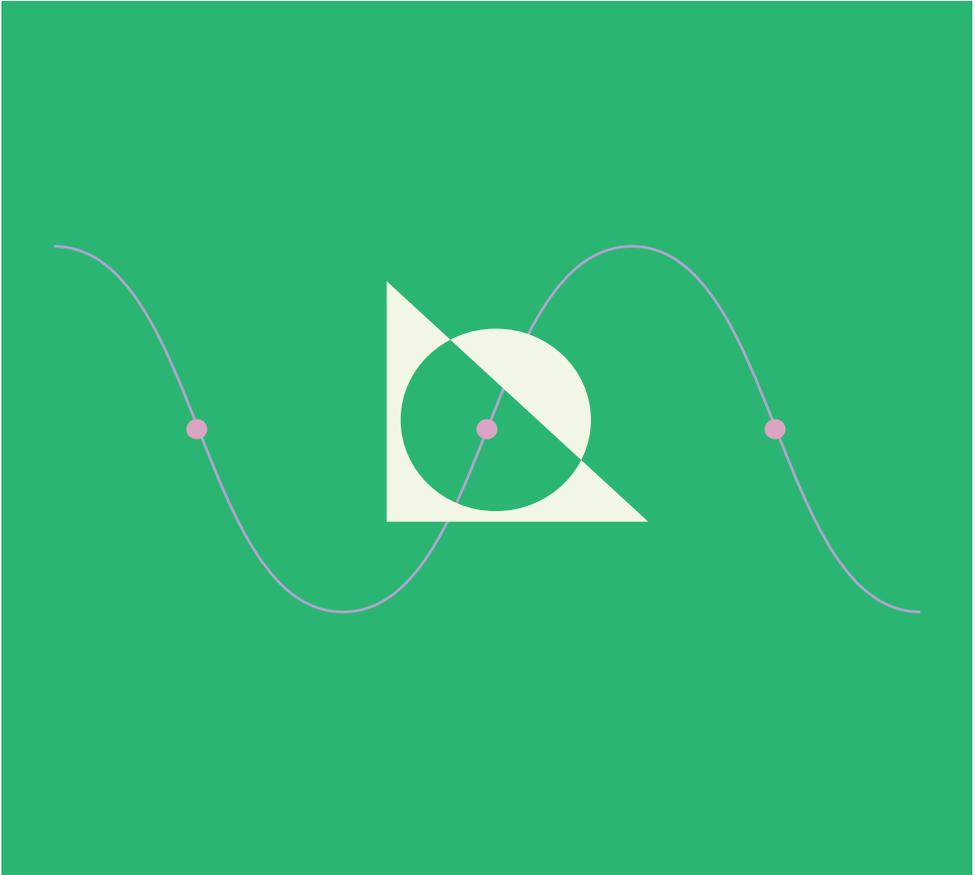


# 서울지역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활력향연  
04

: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와 대안교육연대를 중심으로

\_이상화





## **\_이상화**

**이상화** \_ praxislab2019@gmail.com

목숨이 붙어있는한 공부하고, 데모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대안교육운동을 하는 활동가입니다.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학습자의 삶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대안교육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어서 포그만 독립연구소 '모두의 삶 교육실천연구소(praxislab)를 운영하고 있고, 사는 곳에서 학교밖청소년, 비진학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삶의 전망을 모색하기위해 의정부전환사회교육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와 대안교육연대를 중심으로

### I 연구를 시작하며

### II 대안교육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9p

#### 1 대안교육운동의 등장 배경

- 1) 공교육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 2) 공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운동과 그 한계

#### 2 대안교육 운동의 싹을 틔운 밑거름

- 1) 제도 밖에서의 교육 운동
- 2) 공동육아어린이집
- 3) 생활세계운동

### III 서울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발전 p26

#### 1. 형성기 (1998-2000년) : 학교를 나와 갈 수 있는 곳

- 1) 야학 청소년교실
- 2) 도시형대안학교의 시작
- 3) 탈학교 운동
- 4)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로

#### 2. 대안교육운동 발전기 (2001- 2008)

- 1) 탈학교 아이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등장
- 2) 마을공동체 지향 대안학교의 등장과 운동의 전개
- 3) 대안교육연구와 보급
- 4) 조직적 대응을 위한 연합단체의 출현

### IV 서울지역 대안교육운동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p62

#### 1. 변화와 성장. 성찰의 시기 (2009-2014)

- 1) 새로운 교육의 시도
- 2) 교육 기본권 운동과 정명운동
- 3) 대안교육지원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 4)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2013) 결성과 정책제안의 시작

#### 2 새로운 모색과 제도화 (2015-2021)

- 1) 두 개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 2) 위탁학교를 넘어 공교육의 대안적 모색
- 3)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네트워크
- 4) 대안교육운동의 성과-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와 서울형 대안학교
- 5) 대안교육기관법, 제도화의 과제

### V 결론과 제언 p107

- 제도화 이후 운동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록 > 202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목록 p 121

## 서울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 서울시형대안학교협의회와 대안교육연대를 중심으로

### I 연구를 시작하며

나도 어렸을 때 대안교육을 받았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대안학교가 전국에 10%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는 달라졌을까? 이 질문에 '예 (YES)'라는 답을 갖고 실천하는 대안교육운동 활동가이다. 1990년대의 뜨거웠던 청년운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기에 새로운 활동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단던 어떤 대학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만난 친구가 어느 날 조용히 내 얘기를 듣더니 김희동 선생이 운영하시는 '배움의 숲'이라는 홈페이지를 소개해 줬다. 김희동 선생이 쓰고 그린 하얀 바탕화면 위에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쓴 글과 그림에 마음을 확 뺏기면서 나의 대안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배움의 숲과 민들레를 들락거리고 대안교육연대의 조출한 창립식에 참여했는데 대안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명을 만난 듯,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의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다. 운동과 배움의 갈증을 느꼈던 나에게 대안교육 강좌는 오아시스였고, 우리 지역에도 대안학교를 세워야겠다고 다짐하고는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준비를 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선생님들과 교육연수를 진행했고, 함께하는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마음을 모아 2004년 3월 강북구 우이동에 초

등과정 삼각산재미난학교를 열었다.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있긴 했지만 힘들었다는 기억은커녕 그때를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행복한 생각만 나는, 그만큼 높은 열망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다.

학교를 열고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서 무엇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고, 부족한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인 부끄러웠던 일이 줄줄이 떠오른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생들에게는 해방구이지만 노동자인 교사에게는 힘겨운 직장이다.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일은 끝이 없다.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학생 모집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고, 학교를 좋아하고, 여기가 아니라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시간을 쪼개어 소액이라도 지원해 주는 기업의 공모에 신청서류를 쓰고 후원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비를 마련한다. 그래도 운영이 어려우면 월급을 쉽게 깎아버린다.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에 따라 학교 운영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그 전까지 도시형 대안학교 교사들은 거의 십수년을 이렇게 살았다.

이 연구는 서울 지역에서 전개된 대안교육운동의 시작과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대안교육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 지역적으로 딱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대안교육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이슈와 운동 주체의 성향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전국적인 보편성을 지니면서 지역적인 특성도 있다.

한국의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한계를 자각하고 새로운 교육으로서 대안을 모색하며 지역 기숙형대안학교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서울의 대안교육은 새로운 문화가 가장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수도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며 독특한 도시형 대안학교가 만들

어지게 된다. 학교와 가정의 붕괴로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민중 운동과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간 영역에서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며 서울의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되었고 민관 협치로 새로운 교육의 어젠다를 만들며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육의 모델로서, 제도화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안교육운동 연구는 전국적 차원에서 교육부와 대안교육정책이나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분석이 많은데 이 연구는 지역대안교육운동 연구로서 서울의 비인가 대안학교 전개와 조직화, 지자체 간 관계를 다룬 글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안교육운동에는 중요한 일이지만,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에 영향이 적은 사건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20년의 절절하고 소중한 운동 관련 기록을 다 넣고 싶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분류와 분석 역량의 부족으로 대안교육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구 대상으로는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대안교육운동의 주체가 된 대안학교와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대안교육운동단체인 대안교육연대를 중심으로 두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어떤 전개와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갔는지 살펴보고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제도화 과정에서 대안교육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 연구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홈스쿨링과 기독교대안교육운동은 다루지 않으며 서울 지역 도시형대안학교의 큰 성과 중 하나인 교육활동 또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부족함이 많은 글이지만,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대안교육을 시작하는 교사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에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안교육인가 대안교육운동인가

대안교육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안교육운동은 삶 속에서 지식을 익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배움과 생활의 운동이다. 교육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교육운동이면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사회와 상상력을 실천하는 사회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대안교육은 법으로 정의하는 대안교육에 가까운 것 같다.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의미 있거나 독특한 교육 및 학습활동이라는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의미가 매우 협소해진다.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대안교육기관법)이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서울시대안교육기관조례)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대안교육운동의 개념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동(1999)은 대안교육운동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참된 삶에 이르려는 새로운 교육 실천들’로,<sup>1)</sup> 심성보(1998)는 제도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개혁 지향성을 가지며,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 개혁 운동으로,<sup>2)</sup> 고병현(2000)은 대안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와 변화, 가치 형성에 있어서의 변화, 현 사회 질서와 학교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토대 그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sup>3)</sup> 현병호(1999)는 단순히 교육의 방식이나 틀을 바꾸는

1) 김희동, 「참된 삶으로 가는 교육실천들」, 『민들레』 2호, 1999, 46-47쪽.

2) 심성보,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내일을 여는책, 1998, 213쪽.

3) 고병현, 「한국대안교육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탐방 자료집』, 2000, 48쪽.

것이 아닌 교육의 본래 모습을 찾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운동<sup>4)</sup>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안교육은 실천적 함의가 용어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대안교육의 실천을 통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자 하는 사회변혁적인 지향이 드러나서 대안교육운동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한편 대안교육운동은 국가가 정한(국가가 독점한) 공교육에 저항하는 철학적, 방법적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민교육(民教育)이라고 불렀다. 민교육이란 교육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서도 그 내용에서 공공(公共)의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교육<sup>5)</sup> 또는 민이 주체이되 그 내용에서 공공의 정의를 추구하는 교육, 곧 '스스로 하는 공교육'<sup>6)</sup>이다. 정리하면 '민교육'은 시민의 교육패러다임으로서 '시민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지향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순재(2005)는 한국의 대안교육운동의 흐름을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국가 주도의 제도권 공교육의 틀을 비판적으로 넘어서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근대교육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유학교' 설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겉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예: 홈스쿨링, 청소년문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다면, 후자의 경우 제도권 밖에서 공교육 또는 제도권 교육 그 자체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정규학교의 그 자체의 변혁을 강조함으로써 교육구조 전체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체를 대안교육적 정신과 삶의 실천을 통해 변혁시키기 위한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구분하고 있다.<sup>7)</sup>

4) 현병호, 대담 자료, 『우리 교육』 1999, 3월호.

5) 김희동, 「민교육,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공교육」, 『민들레』 14호(2001).

6) 정유성, 「새로운교육문화 사회운동론」, 『사람, 삶, 되살림』2, 한울, 1998.

7) 송순재,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 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

그중 서울의 도시형대안학교는 후자에 해당하며 도시형대안학교라는 개념도 초기에는 지방에 있는 기숙형학교에 대별되어 도시에 있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로 통용되었으나, 성미산 학교(2008년), 삼각산재미난학교(2013년)가 서울시 네트워크학교로 포함되면서 서울에서 도시형대안학교는 공간적으로 '도시에 있는 대안학교'를 의미하게 되었다.<sup>8)</sup>

종합하면 한국의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맞물린 문제의식과 가치지향이 내포되어 다양한 시도가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이는 근대교육을 넘어 제도나 교사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중시하는 교육과 근대 문명이 소홀히 했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협동과 조화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9)</sup>

『융합교육연구』 9.2 (2005), 33-56쪽.

- 주제들로 봤을 때 전자가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이라면, 후자는 '서울평화교육센터'가 추진했던 '대안교육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발단이다.

8)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네트워크학교는 중·고교과정이 있는 학교만 해당되었으나 도시형대안학교의 개념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초·중·고과정인 삼각산재미난학교가 네트워크배움터가 되었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9)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 II. 대안교육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1. 대안교육운동의 등장 배경

어떤 사회든지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독재와 외세를 타도하는 반독재민주화운동,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에 따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세력이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확산된 사회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합쳐져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계급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사회운동은 급진화 경향을 띠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은 소정의 결실을 보게 되며 이후 시민사회에 정치적 자율공간이 열렸다. 이 자율공간에서 이전의 정치권력에 억압되어 표출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지역주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등장하고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고도의 자본화가 서민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이 외부 억압에 대한 저항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사회 내에서 점차 시민 간의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관계,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운동이 분화되어 다양화되고 있었다.<sup>10)</sup> 이런 분화 현상 속에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공교육에 대해 각 주체가 깨어나며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교육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0) 정태석, 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집합의 정치 경제와 사회 2015 봄호 (통권 105호), 39쪽.

### 1) 공교육의 한계와 문제점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유지,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 등이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교육인 공교육은 산업화 이후 대중화되었다. 공교육의 역사는 자유교육에서 평등교육으로 변천되는데 이념적으로는 시민혁명을 거쳐 만인이 평등해진 사회에서 배울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공장노동을 더 잘 수행해 낼 참을성 있고 시간을 잘 지키는 표준화된 인력 양성과 새 지배계급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등 전통적인 집단에 충성하기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민을 기르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sup>11)</sup>

조한혜정(2002)의 지적대로 보편화된 근대 교육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 노동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 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여 확립된 공교육 제도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기준과 내용,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교육적 소외와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개항 이후 전통적인 교육제도 대신 받아들여져 광복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서구식 공교육체제이다. 한국의 공교육은 식민지를 통해 타율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독재 정권,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만나 근대 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면서 한국 교육의 특수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sup>12)</sup>

11) 또하나의문화 편집부, 1997, 새로 쓰는 청소년이야기1-아이들이 없다. 또하나의문화.  
12)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군사정권은 교육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고 성장이데올로기, 정권정당학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강력한 교육 통제를 통해 파시즘체제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추구하였다.<sup>13)</sup> 한국의 공교육이 문맹률을 낮추고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관료적인 교육체계는 독재정권이 후에도 지속되는데 지배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현재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으로서 교육 주체의 소외와 비인간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다. 단기간에 이룬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배경으로 고학력 우대의 경제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신중산계층으로서 화이트칼라의 출현은 교육을 통해 계층을 이동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에 불을 지폈다. 1980년대 경제호황은 공장 노동자의 부모 세대가 자식만큼은 사무직 노동자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에 경제력을 더해 주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학벌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경제 구조하에서 국민의 교육열은 독특한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증폭되어 왔고, 국민은 교육을 투자로, 학교를 지위 상승의 통로로 인식하는 수단적 교육관을 형성함으로써 학력병이 만연하게 되었다.<sup>14)</sup> 학교의 교육 과정은 대학 입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였고,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허울 아래 아이들은 무한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 1990년대 공교육의 위기: 학교 붕괴

1980년대까지의 교육의 주된 문제 제기의 내용은 주로 암기식, 주입식 입시

13) 이종태, 위의 책.

14) 권태희, 「한국 대안교육운동 전개에 관한 일 고찰」, 2002.

위주 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등이었다. 아직까지 교육은 희망이었고, 학교교육은 비판의 지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당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의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이전까지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육자나 학자 등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대상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표 1-1] 학교급별 취학을 변화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전문대 포함)
1965	97.7(%)	41.4	26.4	-
1970	100.7	51.2	28.1	8.4
1975	105.0	71.9	41.0	9.3
1980	102.9	95.1	63.5	15.9
1985	99.9	100.1	79.5	35.1
1990	101.7	98.2	88.0	37.7
1995	100.1	101.6	91.8	55.1
2000	97.6	98.8	95.8	77.8

주: 취학률=학교급별 재학생 수/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도시형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2000, 9쪽에서 재인용.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학생들의 입시 압박은 더욱 커졌고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높아진 대학 진학률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 간의 서열은 더

육 세분화되고 공고해지면서 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은 갈수록 심화되었는데,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열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에 성적과 입시 등의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100여 명이 되면서 대학 입시가 사회 문제화되었다. 청소년의 가출이나 학교 중퇴가 급증하여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이 경제 요인으로 학교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된 학교 거부의 의미를 띠면서 제도권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학교폭력, 왕따 현상 등 학교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교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학생이 제도권 교육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사교육의 보편화로 지식 정보 제 공이라는 교육 기능도 사실상 사교육에 자리를 내어준 학교교육은 존재 의미마저 부정당하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조한혜정(1996)은 이렇게 분석하였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소외되고 관료화된 상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계에 직면하여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곧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들이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전교조운동으로 대표되는 교사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면, 이들은 스승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권위와 지배를 탈피하여 노동자라는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자리매김을 통한 주체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체제 유지에 힘쓰는 교육 관료들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사이, 또 다른 주체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학생, 청소년들이다. 곧 교사들과 교육 관료들의 대립이 근대와 전근대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이미 학생들은 동기상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소비 상업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들이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탈근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부조화로 인해 우리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엄청난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 2) 공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운동과 한계

### (1) 교사들의 교육개혁운동: 전교조운동

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온 중요한 움직임으로 교사 중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1987년 대중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교육운동이 1989년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전교조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되기까지 정부와 보수적인 교육계의 탄압에도 관료적 권위주의와 입시 위주의 비인간적 교육을 비판하면서 기존 교과서 비판과 새 교과서 만들기, 각 교과 학습지도서 만들기 같은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말 학교교육의 위기 상황을 맞아 전교조는 교육 문제의 본질을 교육의 공공성 위기로 규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공교육의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15) 조한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6).

이를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이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수요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고 보고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였다.<sup>16)</sup>

## (2) 학부모운동의 시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1,7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교육개혁운동의 주체로 나서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을 결성했다.

참학은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와 퇴학 등 처벌을 받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부모운동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또 다른 학부모단체로 1990년에 창립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공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회복하고 인간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부모교육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sup>17)</sup>

전교조와 참학,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 같은 공교육 내의 교육운동은 기존의 관료화된 교육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주체의 노력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

16) 임종화, 2002,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38-41쪽.

17) 2020년 (사)인간교육실현함께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부모 교육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sup>18)</sup>

새로운 교육이념과 방법의 실천으로 열린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성과를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학령기 아이들의 절대다수가 공교육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체제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지난한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조한혜정(1996)의 지적대로 이미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탈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체제 개혁적인 운동의 지향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학교교육의 전면적인 위기 속에서 당장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근대 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자각이 자리하고 있고, 서구 근대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갈망이 담겨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근대교육에 대한 반성과 서구의 탈학교 이념이 논의되고, 서구의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며 형성된 담론은 1990년대 학교 붕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아이들의 적극적인 저항을 맞아 한국에서 대안적인 교육 실천과 대안교육운동의 촉발로 이어진 것이다.

18) 서덕희, 「학부모운동의 변천에 관한 한 교육인류학적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2018, 21(1), 16-17쪽.

## 2. 대안교육운동의 싹을 틔운 밑거름: 1990년대까지의 대안적인 교육 실천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안교육운동은 근대교육의 한계와 서구 근대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토대로 1990년 학교 붕괴라 일컬어지는 학교교육의 위기 속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현상에 따라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닌 이전의 사회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대안적인 교육 실천의 흐름 속에서 이들 경험이 축적되고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교육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실천으로 대안교육운동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민중교육과 공부방운동 그리고 유아 단계의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리고 생활세계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도 밖 교육운동: 민중교육·빈민 지역 공부방운동

학교교육의 보편화는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부정적 측면을 수반하고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취학자의 소외감이 커졌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이 점차 커져 가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오히려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sup>19)</sup>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1970년대 흑독하게 추구된 정치적 해방 운동을 배경으로 공교육을 벗어난 제도 밖에서 의미 있는 교육 실천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다양한 형태의 '민중교육'운동으로 여기에는 도시로 유입된 근

19) 이종태, 2011, 「대안교육의 철학과 역사」, 대안교육연대 신입교사연수 자료집.

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학과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 내지 '해방의 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시민학교, 민족학교, 노동자대학 등의 형태로 교육운동이 실천되었다. 민중교육의 운영자나 교사는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학력 취득보다는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배움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존의 학교교육이 실생활과 거리가 먼 지식과 기존 사회의 주류가치 습득을 위주로 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제도 교육에 대한 대안적 위치에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펼쳤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민중교육은 대안교육에 비견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20)</sup>

두 번째는 저소득 빈민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운동'이다. 공부방운동은 도시빈민 지역에 강제 철거가 잇따르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빈민운동과 맞닿아 있다. 일부 빈민운동가와 빈민 지역의 교회 실무자들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놀이와 공부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작된 공부방운동의 바탕에는 빈민운동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열정이 깔려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공부방 활동의 독특한 내용과 형식은 빈민지역 아이

### 20) 이종태, 위의 글.

21) 공부방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이며 아동보호를 통한 부모의 생계활동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통로로서, 가난으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1990년대 들어 철거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개별화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 셋방으로 흩어지면서 빈민운동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공부방의 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렇듯 주변 환경이 변화되면서 공부방 존립, 방향성, 활동에 대한 실무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활동가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 여간의 워크숍을 통해 공부방의 위상을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 삶을 가꾸어 가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부방운동은 성인 중심의 빈민운동 흐름에서 벗어나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회교육 운동으로서 본격화되었다.

들에게 기존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활동 내용은 숙제와 학습지도 외에도 공부방이 나름대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개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의 학습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소재로 삼는다. 그 밖에 야외 학습이나 학예회를 갖기도 하고 자치회를 통해 민주적인 훈련을 쌓기도 한다. 공부방연합회를 통하여 청소년문화제 같은 연합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기존의 교육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 내용과 방법, 헌신적인 교사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한 자치 활동 등은 학교교육에서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공부방운동의 교육적 성과의 일부는 1990년대의 대안교육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1970~80년대 민중교육과 공부방운동 등 제도 밖의 교육적 실천들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교교육기회 확장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학교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없는 혹은 교육 기회를 얻어도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끊임없이 결손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노력은 제도권 교육이 위기를 겪고 학교 붕괴 현상이 일어나던 1990년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탈학교 아이들이나 위기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대안학교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 2) 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빈민지역 탁아운동에 뿌리를 두고 1978년 생활야학 형태로 세워진 보육교사 양성과정인 '해송보육학교' 출신의 교사들이 운영한 '해송

22) 이종태, 앞의 글.

23) 일부 야학은 1990년대 청소년과정 개설을 거쳐 직접 대안학교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지역에서는 남부야학이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로, 은평야학이 은평씨앗학교로 전환하였다.

유아원'과 '해송아기동지'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sup>24)</sup> 공동육아연 구회는 해송아기동지의 실천을 통해 얻은 자각을 토대로 대안적 모델로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든다.

정병호(황윤옥 재인용)는 해송아기동지가 지역사회의 대안적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취약한 구조(기획, 재정, 인력, 운영 면에서 외부의 개입에 의존)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생적인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인 터전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운영에서 부모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협동조합형 모델을 제안했다.<sup>25)</sup>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기존의 보육체제를 비판하며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보육과 교육을 실천한 유아교육 단계의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아이들의 자발성과 친환경적인 교육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전국에 40여 개를 헤아릴 정도로 확산되고 적지 않은 수료 어린이를 배출하게 되었다.

관료화된 공공립 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은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 반복,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기범(황윤옥 재인용)은 어린이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생태적, 공동체적 활동을 토대로 교사와 부모, 아이들이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24) 해송유아원은 1980년 신림동 난곡의 철거민촌 꼭대기에 천막으로 지어진 빈민지역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정권의 일방적인 제도화로 동력을 잃었고, 그 후 1984년 창신동 동대문 시장권에서 노동자들의 아이들 보육을 위한 '해송아기동지'로 이어졌다.

25) 황윤옥, 2008, 「공동육아운동 제도화의 경로와 과정, 성격에 대한 연구」 37p-40p

26)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https://gongdong.or.kr/>).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되었으며 2016년 동법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되었다.

학습공동체, 보육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특징인 것이 공동육아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이들이 장애 정도, 부모의 혼인 상태, 성별, 지역, 계층 등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 방식으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조직 형성, 정관 제정, 교사 채용, 장소 선정은 물론이고 시설, 어린이집 생활, 운영 방법 등 원칙과 내용을 함께 채워 나감으로써 육아의 질을 높여 가고 사회적 육아의 실천적 장이 되는 구체적인 운동의 공간이자 생활공간이다. 부모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대안적인 유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통해 얻은 함께 키우는 돌봄과 교육의 경험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거쳐 대안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학령기를 맞자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높은 교육열과 돌봄 시스템의 부재로 방과 후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되고 즐겁게 생활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며 직접 방과후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못했다. 공동육아를 경험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수동적이고 틀에 박힌 학교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들은 초등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수요자이면서 설립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초등대안학교는 공동육아 어

27) 황윤옥, 2008, 「공동육아운동 제도화의 경로와 과정, 성격에 대한 연구」46p-47p

린이집과 같은 마을에서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대안교육을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아동관이나 교육철학이 초등대안학교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sup>28)</sup>

### 3) 생활세계운동(신사회운동)

서구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 여성운동, 시민권운동, 반핵평화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전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인 노동운동이 조합 내에 편입되면서 저항성을 상실하자, 국가에 저항하는 새로운 형식의 운동이 출현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주제, 이념, 조직 면에서 새로운 운동 논리를 지녔기 때문에 서구의 학자들은 신사회운동이라고 불렀다.

기존의 계급 중심 노동운동이 경제적 이익이나 제도적 정치 과정 참여에 국한된 것과 달리, 이 운동은 신체, 건강, 성별 간의 정체성,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유산과 정체성 등 생활세계와 관련된 것을 포괄하며 이러한 다양한 쟁점의 중심적인 가치 지향이 자율성과 정체성이기 때문에 관료적 규제에 저항하고 행위의 수평적 통합적 성격이 강하여 중앙집권과 수직적 위계를 타파하고 통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특징<sup>29)</sup>이 있고 임종화(2002)와 권태희(2002)는 이러한 특징이 대안교육운동 그룹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대안교육운동은 시민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교육운동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정태석(2015)은

28) 황윤옥, 2008, 「공동육아운동 제도화의 경로와 과정, 성격에 대한 연구」, 74p-75

29) 오페(Clusoffe), 1993,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정수복 역, 문학과지성사.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운동 양상이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다른 이유는 신(new), 새로움의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정태석(2015)은 서구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은 복지와 분배를 둘러싼 계급타협 중심의 제도정치에 도전하는 풀뿌리운동의 급진성에 있었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은 급진적 민중운동과 차별화하는 시민운동의 중간층적인 온건성에 있다고 보고 있다.<sup>30)</sup>

이는 서울 도시형대안학교의 주체가 교육의 중립성이나 탈정치적인 지향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중앙집중적인 조직 방식, 투쟁의 운동 방식을 가지는 전통적인 사회운동이론과는 다른 인식의 틀을 지닌 새로운 사회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면 선택과 자기실현, 자기정체성의 새로운 규정의 추구하고 같은 '삶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생활세계운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대안교육운동은 이렇게 생활세계운동이 활발해진 상황 속에서 교육 분야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운동으로 볼 수 있다. 민중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에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결성된 전교조가 전통적인 사회운동으로서 교육운동이라면 대안교육운동은 생활세계운동이 활성화된 사회적인 배경으로 탄생한 생활세계운동으로서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생활세계 운동은 대안교육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여성운동, 생협운동, 환경운동, 장애인인권운동, 지역주민운동은 대안교육에 많은 영감을 주고 교육 내용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학교 공동체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생활세계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활동가가 대안교육운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30) 정태석, 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 경제와 사회 2015 봄호 (통권 105호).

## 생활세계운동을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적 실천

▲ **또문캠프:** 1984년 결성된 '또 하나의 문화'(또문)는 권위주의적 획일적 교육풍토와 사회분위기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며 생활세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대안문화운동'을 지향했다.<sup>31)</sup> 교육은 그 실천 영역 중 하나로서 또문의 동인들은 방학 동안 며칠만이라도 '자아 읽기'와 '세상 읽기' 방법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린이캠프를 열기 시작했는데 '삶과 관련된 지식과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린이, 함께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어린이'를 이상으로 삼았다(이종태, 1995: 243에서 재인용). 시작 당시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 충격을 주었으나 대안교육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되었다.<sup>32)</sup>

▲ **따또학교:**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따또학교)는 서울 동송동의 주말학교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또학교는 '아이들을 더는 학자 같은 얼굴을 한 채 딱딱한 의자에 앉혀 놓고 싶지 않으며, 어른들이 길들여 놓은 점잖은 위선으로부터 생활세계의 현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자 또 하나의 학교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다.<sup>33)</sup>

31) 문화인류학자인 조혜정·조옥라, 사회학자 조형, 여성학자 박혜란 등이 주요 멤버이다.

32)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문화충격적인 활동이었다. 자유놀이 시간엔 치마를 입은 남자교사가 고무줄놀이를 하고 여자교사가 축구와 배구를 하거나, 캠프 첫날부터 '잠자는 시간'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밤잠이 없는 아이들은 밤 12시를, 다음날 일정을 걱정하는 교사들은 10시를 주장) 격론은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금씩 양보하는 것. '취침시간은 10시로 정하고 늦잠을 자고 싶은 사람은 더 늦되 조용히 논다'는 식으로 양성적 가치관이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회원들은 짧은 캠프 기간에 주어지는 '문화 충격'이 가정이나 학교에 돌아간다면 잊히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1994년 캠프를 중단했다가 '또 하나의 문화'를 찾는 노력은 어릴 적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998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9. 10. 11. 기사 참조).

33) 권태희, 「한국 대안교육운동 전개에 관한 일 고찰」, 2002.

그 외에도 계절학교인 성남 주민 생활협동조합의 '창조학교', 주말학교인 '다솜학교', '두밀리 자연학교', 대구 '민들레학교', 자유학교 '물꼬 준비 모임', 부산 '창조학교' 등이 있었다. 각기 독립적으로 새로운 교육이념과 교육 방법을 모색하던 이들이 1995년 상호 연대를 위한 모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안 교육이 하나의 운동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바탕으로 1996-97년 대안교육 한마당이 펼쳐지고 이 모임은 향후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교육그물모임'을 만들고 대안교육연대로 이어진다.

### III.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발전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특징은 도시형대안학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운동의 대안적 교육 실천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교육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 기숙형대안학교 등장이 대안교육운동의 시작이었다면 서울에서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적 소외와 돌봄의 부재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부모의 실업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나오거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물질적, 심리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공교육제도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다. 학교를 대체할 거점공간이 필요했던 아이들은 야학이나 공부방, 청소년 공간으로 가기 시작했고 헌신적인 활동가와 시민의 후원으로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민간 영역에서 실천하면서 도시형대안학교가 등장했다.

계층적 층위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빈부격차가 심한 대도시의 특성으로 서울 지역은 다양한 탈학교 청소년들이 존재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대안교육운동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의 대안교육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도시형대안학교의 출발점이 된 취약계층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운동, 후기 산업사회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소비 상업주의의 문화적 혜택 속에서 탈학교 담론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저항으로서 탈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대안교육운동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교육운동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주로 도시형대안학교, 두 번째는 홈스쿨과 도시형대안학교, 세 번째는 초등대안학교 형태를 띠고 각각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장에서는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하고 공통적인 지향점을 지닌 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2008년까지의 대안교육운동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안교육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교육 관련 연구와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통해 초기 대안학교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1. 형성기(1998~2000년): 학교를 나와 갈 수 있는 곳

이 연구는 지역 대안교육운동과 관련한 연구로서 서울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안교육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탈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갈 수 있는 상시적인 교육 현장이 생기기 시작한 1998년을 대안교육운동의 시작으로 보았다. 2000년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쉼터와 같이 일시적인 보호와 돌봄을 위한 공간이 아닌 탈학교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현장이 생겨나고, 탈학교 운동이 시작되며, 도시형 대안학교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시대 안교육센터 설립 준비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 1) 야학 청소년교실: 남부야학 청소년교실과 은평야학 청소년교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있기 전에는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구로구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주민들은 상업이나 단기간 노동직(아르바이트, 단순 건축) 종사자가 높았으며 신림동은 유흥업소가 즐비한 상업 지역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유흥업과 관련된 단순 노무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지역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과 문화는 다른 탈선을 위한 장치로서 작동했다.

1973년 난곡, 신림7동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시작한 남부야학은 2000년 학교를 나온 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을 개설했다.<sup>34)</sup>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은 청소년들이 신림7동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특강과 나눔터 수업을 진행했는데 2001년 8월부터는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을 탈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개설하였다.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은 문제가 있는 가정과 입시 위주의 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탈학교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적, 문화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 직업교육,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탈학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문제아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사회의 당당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000년대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십대부터 못 다한 학력을 취득하려는 주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어르신이 모두 한교실에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어 못 다닌 어르신들이나 어머니들이 보기에겐 어쨌든 학교를 뛰어나온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십대적인 특성을 참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고, 검정고시를 포함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김은임, 전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교사)

은평 청소년야학은 1980년 5월에 은평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은평야학

34) 남부야학은 1975년 남부고등공민학교로 공식 인가를 받고 1996년 고등학교 과정 개설을 거쳐 2000년 한글교실을 개설(초, 중, 고급 과정 3개 반)해 운영했다. 2001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중·고등과정 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바둑, 노래반, 철학, 한문, 교양 수업 등 개방 수업을 개설하였고 2001년까지 남부야학의 졸업생은 800명가량 되었다고 한다.

으로 시작했다. 이후 동녘교회 예배당을 쓰다가 교사와 학생들이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모아 공간을 마련했다. 1996년 ‘한글 검정고시 생활 야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은평지역사회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청소년 미술동아리도 만들어 ‘꿈이있는푸른학교’를 진행했다. 2000년부터 활동한 최혜영 교사는 외환위기가 터지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찾아오는데 기존의 야학 프로그램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청소년야학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주부나 청장년층은 돈을 조금 들여 학원을 가거나 다른 지역사회기관을 찾아가갈 수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갈 만한 공간이 없고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청소년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패턴으로 보니 아이들이 그때는 나가서 놀 시간이지 검정고시를 위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일 년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으로 고생이 심했어요. (최혜영, 은평시민신문 2009. 3. 13.)

## 2) 도시형대안학교 시작: 도시속작은학교

1995년부터 청소년 및 청년 사업을 해 오던 비영리 단체 ‘한국 청년의 전화’에서는 보호관찰 중도탈락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종합 공공근로사업<sup>35)</sup>을 서울시에 제안하며 위기 청소년을 만나 왔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으로 가정 해

35) 1999년 1월 서울시와 함께 학교 중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사업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단따돌림 상담 전화인 ‘외톨이 전화’를 운영하였다.

체가 늘어나자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이 늘어났고 이때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6개월 동안 50여 명 참여하였다. 1999년부터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검정고시와 예체능 활동, 상담지원 등 본격적으로 학교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3월 한국청소년재단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해 4월 도시속작은학교를 개교했다.

도시속작은학교는 1999년 외환위기를 맞아 급증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무작정 함께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다 함께 마음먹고 200m를 걸어가야 했고, 노트북을 살 돈도 없었으며 총 3번의 이사를 거쳐 서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도시속작은학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는데 지역적으로는 마포교실과 개봉교실로 나누어 운영했다. 다른 청소년 공간이 10명 안팎의 청소년을 돌보았다면 도시속작은학교는 4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교육과 운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고민이 많았다. 그 당시 대안학교는 모두 지방에서 기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도시속작은학교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의 틀을 갖춘 형태인 도시형대안학교로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sup>36)</sup>

한 해에 7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중도탈락 청소년. 이들 중 대다수는 도시에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으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대안학교는 산촌형 기숙학교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격월간 “만들레” 8호)

36) 김성기, 2003, 「도시형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17쪽.

### 3) 탈학교운동: 민들레출판사와 탈학교 모임

민들레출판사는 근대교육과 경쟁적인 입시주의를 비판하는 《학교를 넘어서》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문을 열었다. 탈학교 청소년이었던 이한은 이 원고를 쓰고 대학교 1학년 때 완성한 초고를 들고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여러 출판사에 의뢰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원고의 내용이 현 교육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급진적인 방안인 데다가 그 비판의 주체가 탈학교 청소년이었다는 점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때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이 원고를 접한 현병호 씨가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하면서 민들레출판사가 시작된 것이다.

민들레출판사는 학교 기능의 회복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 근대교육으로 대표되는 ‘학교’의 한계를 짚어내고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들레출판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탈학교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킹하고 탈학교와 대안교육에 관련된 서적을 펴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정치가들이나 교육학자들은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해도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사람보다는 학교에 더는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희는 학교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같은 글 “민들레” 8호)

한 해에 7만~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하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학교에 있었고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문제아, 사회부적응자, 현실도피자, 날라리... 자퇴에 대한 부정적이고 일반적인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홀로 서야 하는 자퇴생들은 1999년 3월부터 하나둘 민들레출판사를 찾았고 같은 해 8월 ‘탈학교모임’을 만들어 자아와 배움을 찾는 활동을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자퇴일기》를 1999년 12월 출판하면서 방송에도 알려져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민들레출판사를 찾아왔다.<sup>37)</sup> 같은 해 11월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운영했으며 1년 뒤 2000년 11월 ‘자퇴생의 전화’를 개설하여 또래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탈학교 모임은 2001년 민들레사랑방으로 이어진다.

민들레출판사는 교육으로 가슴앓이를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이들의 연대를 모색하며 격월간《민들레》를 창간했다. 그 당시에는 교육 전문 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에서 내는 교육 격월간지 ‘처음처럼’(1997년 5월 창간)이 발행되고 있었다. 처음처럼은 ‘교육사랑방’에서 제안되고 토론되는 내용을 모아서 엮은 것으로 대안적인 교육을 꿈꾸는 많은 공교육 교사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민들레출판사 현병호 대표는 부모들이 보다 쉽게 읽고 사유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격월간 《민들레》를 만들었다.

37) 자퇴일기를 함께 쓴 ‘탈학교모임’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사진강좌, 사상연구모임, 만화강좌 등 각각 하고 싶은 소모임을 꾸려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공동체, 학습문화소모임, 탈학교청소년 소식지 발간 같은 일도 계획했다.

지금의 부모들은 선착순 논리에 따라 학교에 다녔고, 다시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학교에 말입니다. 학교에 문제가 많긴 한데,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더는 학교에 기대를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그것이 또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곧 학교교육'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학교가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우리는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지요. 학교의 교육독점을 막고 우리 자신들의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도 그에 맞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막연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겁니다. (현병호, 《우리교육》 3월호, 1999)

탈학교운동을 놓고 '그러면 공교육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냐', '탈학교는 사교육을 조장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현병호 대표는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곧 탈학교인 것은 결코 아니다. 탈학교운동은 학교제도가 낡은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 현재 우리 사회를 움아매고 있는 학력 중심의 사회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고 학력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을 결정짓는 사회질서를 바꾸어야 한다. 학력주의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아이들의 고유성을 존중하기 위해 제도권 학교만이 공교육의 현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교육 현상이 공교육의 범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탈학교나 대안교육이란 것은 단순히 교육의 방식이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쟁과 능력주의를 사회를 양산하는 지금의 교육제도, 경제제도를 넘어서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것의 실천적인 형태로 민들레에서는 일종의 품앗이인 교육통화를 시도하는데 이것이 '민들레 교육통화시스템'이다.<sup>38)</sup> 자본주의 시스템과 화폐경제의 대안으로 돈이 아닌 방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와 이런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한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민들레출판사가 표방하는 시각이었다.

#### 4)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로: 연세대청년문화센터와 하자센터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세대갈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와 가정 해체, 악명 높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심한 불신과 냉소, 자포자기로 치닫는 현실에 대해 "문화가 없다"며 비판적 현실을 진단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만들어 낼 '거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로 모여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획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젝

38) 녹색평론이 국내 최초로 레츠를 다룬 것은 1996년인데 1998년 3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미래화페란 이름으로 레츠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가령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면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로 부터 교육을 받고, 그만큼 자신이 가진 교육적 기능을 교습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품으로 팔면 된다. 여기에는 악기 연주나 외국어 등은 물론이고 바둑, 태권도, 테니스, 다도, 도자기공예, 글쓰기, 웅변 등 소비자가 있는 모든 기능이나 지식과 물품이 포함되었다. 컴퓨터통신의 보급에 힘입어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오랜 시간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트에 '유스비전 202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998년 11월부터 뜻을 같이하는 인문사회학자들,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 민중운동을 한 사람들, 예술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해치지 않는 공간들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하자총서1. '왜, 지금 청소년')

유스비전 2020 기획의 핵심에는 공공성, 복합성, 실험성, 연계성, 정보 공유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는데, 파행적이고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심하게 왜곡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작업으로서, 국가의 공공부문과 민간 공공부문의 협동대안을 제시하고 남성중심주의, 세대중심주의, 특정계급중심주의를 넘어선 청소년들이 '자율과 공생의 원리'를 익히는 공간으로서, 지방자치기구의 일방적 지원과 포섭이 아닌 시민의 창의력과 자발성으로 공공성을 완성하는 새로운 관민협동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sup>39)</sup>

그 당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대표되는 공공 청소년 시설에서 수행해 온 청소년 문화활동은 천편일률적이었으며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심지어 청소년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주부들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강좌와 수영장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서 정작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설보다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소비유희공간에서 여가를 즐겼다.

공공 청소년 시설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문화적 자극과 진로의 동기를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센터인 '하자'가 출발하였다. 한 번 직업 체험을 해봤다는 데 그치고

39) '하자가 만들어지기까지, 하자총서1. 왜, 지금 청소년, 165-173쪽. 서울시는 1984년에 지어진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을 '정보문화센터', '성문화센터', '직업체험센터'로 나눠 기존의 청소년회관 기능을 전환하고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하는 기존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적, 교육적 요소를 더한 곳이 '하자'이다.<sup>40)</sup>

청소년문제 해법을 찾아서 -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공식 오픈에 부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인천참사 청소년 52명 사망, 탈학교 청소년 40만 명, 청소년들 아이디어가 21세기를 이끈다. …1970년대만 해도 학교를 가지 못해 한이 맺힌 청소년들이 … 노동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을 만들어 주고 20년이 지났다. 모든 청소년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졸업장만 아니라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중고교생이 40% 달한다는 조사가 나와 있다…” 십대들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문화산업과 시민문화를 꽃피우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를 우리는 'hajal센터'라고 부른다. … 「하자센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도 하는 후기 근대적 일꾼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보를 공유할 줄도 알고 네트워크 능력을 지닌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하자센터'는 기존의 직업훈련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창의력을 살려 자신감을 심는 직업 체험의 장이고, 대안교육의 산실이며, 문화산업을 육성해갈 생산적 작업장이다. (서울시정연구원, 1999. 12. 회보)

하자센터는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대중음악', '시민문화', '웹 디자인' 등 5개 문화작업장이 첨단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각 전문가 그룹과 청소년이 공동 작업을 하고 청소년 자치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이 현재의 학교 체제에선 얻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대안적인 학습장으로 시작되었고 첫째 5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40) 위의 책, 268-313쪽.

유스비전 2020과 하자센터는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형태의 청소년 공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교육적 공간 기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서 도시형대안학교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되었다. 또한 그 경험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도시형대안학교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2. 대안교육운동의 발전기(2001~2008년)

2000년 최초의 도시형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는 도시속작은학교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다. 청소년야학이 대안학교로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학교 현장이 생겨나기도 하면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대안학교의 설립이 활발한 시기이다.

공교육에서 떠밀려 난 아이들을 민간 영역에서 책임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지역에서 탈학교청소년들을 돌보던 민간 영역을 연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배움과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설립(2001)했다.<sup>41)</sup> 2008년까지의 대안교육운동은 본격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시기로, 넓게 보면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기로 볼 수도 있지만, 발전기로 시기 구분을 한 것은 2001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설립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도

41) 1999년부터 서울시는 특화시설(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학교 밖 학습'과 '대안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존 청소년수련 방식으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청소년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시형대안학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로 보았다.

2004년경 다른 흐름의 대안교육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공동육아 어린이 집을 기반으로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초등대안학교이다. 2001년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인 부천 산어린이학교, 광명 범씨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에도 2~3개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생활세계운동을 해 온 부모들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마을학교로서 정체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초기 서울의 대안교육운동은 중고등과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대안학교와 초등과정부터 시작하는 마을공동체형대안학교 등 두 흐름으로 나뉘어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 <설립 주체에 따른 학교 구분>

민간현장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 현장
①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은평씨앗학교(2001),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2001), 꿈틀학교(2001), 광진 도시속작은학교(2004)	도시속작은학교(2000) 하자작업장학교(2001) 스스로넷미디어스쿨(2001) 난나학교(2001) 대안학교 한들(2004)
② 특수 대상층을 위한 학교: 사랑사람 나눔학교(2001), 성장학교 별(2002), 셋넷학교(2004), 하늘 꿈학교(2003)	
③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지향 현장: 삼각산재미난학교(2004), 성미산학교(2004)	

### 1) 탈학교 아이들을 위한 도시형대안학교의 등장과 운동의 전개

탈학교 아이들을 위한 도시형대안학교는 대상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탈학교의 두 번째 유형인 후기 산업사회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소비산업주의의 문화적 혜택 속에서 탈학교 담론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서 탈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있는 민들레와 하자 센터는 앞의 형성기에서 다른 내용과 중복되므로 기술하지 않는다.

(1) 위기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 도시속작은학교(2000), 은평씨앗학교(2001),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2001), 꿈틀학교(2001), 광진 도시속작은학교(2004)

한 해에 7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중도탈락 청소년, 이들 청소년 중 대다수는 생활근거지가 도시이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도시형대안학교는 산촌형기숙학교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 교육적 혜택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면 교육을 통한 계층의 재생산은 불가피해진다. 그런 까닭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의 지원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현실적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염병훈, 2019, 《민들레》 8호)

① 저녁에 운영하는 야학에서 오전에 문을 여는 학교 체제로 : 은평씨앗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야학 청소년교실에서 본격적인 전일제 학교 형태로 전환하며 은평씨앗학교와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보통 야학은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운영되었고 늦은 오후와 저녁에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교실을

거쳐 대안학교로 전환하면서는 공교육의 운영시간과 같은 오전에 문을 열게 되었다. 또한 대학생 위주의 자원봉사자가 시간을 내 활동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책임감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학교를 운영하였다.

씨앗학교는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정되고 올바른 시각을 키워주고자 하며, 바른 교육의 지식 전달과 함께, 서로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며 미래의 성인이 될 청소년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인성교육 제공, 공동체 정신의 함양 등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 ② 위기가 더 이어지지 않도록 삶을 지지하는 꿈틀학교(2002)

꿈틀학교는 노원구 상계동과 강북구 삼양동, 봉천동에서 철거민 투쟁과 공부방을 운영하던 김선옥 씨를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봉천5동과 7동엔 빈집이 많았는데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가출을 해서 빈집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거나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청소년이 많았다. 가정의 붕괴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공교육에서 탈락한 이런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자립과 진로에 교육목표를 둔 꿈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조건만남, 원조교제가 너무 심했

어요. 여자아이들이 가출하고 나면 조건만남을 한 핸드폰 번호를 대여섯 개씩 갖고 들어오는데 번호를 따서 전화해 보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들이 많아요.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가정에 돌려보내도 또 가출하게 되고, 가출하면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 가출이 장기화되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쉼터를 7~8년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2년 정도 쉬고 있는 동안 시흥의 새봄교회에서 청년활동을 하셨고 장년이 되셔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을 설립했으면 하셨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제안했고 그 학교가 꿈틀학교입니다. (김선옥 꿈틀학교 교장)

## (2) 특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

① 발달장애청소년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 사랑사람나눔학교 (2001), 성장학교 별(2002)

‘사랑사람나눔학교’는 2001년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공동체대안교육을 위한 ‘사람사랑나눔교실’로 시작한 학교이다. 사랑사람나눔교실의 교사였던 강소영 교장은 2002년 발달장애청소년 공동체 도시형대안학교 사랑사람나눔학교를 열고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2004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발달장애청소년 학력 인정 위탁형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성장학교 별’은 김현수 교장이 2001년 봉천동에 신경정신과병원을 개업하면서 2002년 학교를 열었다. 공교육 안에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병원 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경험하게 된다면 더욱 단단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열었다.

개업하기 이전부터 도시속작은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봉천 나눔의집과 연결해서 청소년쉼터, 청소년그룹홈 아이들도 만났어요. 근데 가보니 아픈 아이들은 교육이 되려면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두 분과 함께 병원 아래층에 성장학교 별학교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거리에 있었는데, 도시속작은학교 교사였던 양윤경 씨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교육청을 돌며 연락처를 받고 가정마다 연락을 해서 검정고시를 무료로 해줄 테니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검정고시가 아니라 질병이나 중독, 폭력(가정, 성)이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고 이 아이들은 돌봄보다도 더 시급한게 치료-특수한 케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

②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 : 셋넷학교, 하늘꿈학교

셋넷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중·고등 교육과정 각 1년 3학기씩 운영되었다. 박상영 교장은 1990년대 초반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따도학교 중등과정을 6년간 이끌고 2001년에는 난나학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셋넷학교는 전국 다섯 곳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중 유일하게 종교계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었다.<sup>42)</sup>

42) 셋넷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의 남한 문화 적응과 현실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진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었고 현재에는 남북 미래세대와 아시아 청소년들이 문화를 매개로 공존 그물망을 짜기 위한 평화감수성을 훈련하는 일을 하며 다문화 우정체험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가 평등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의 평화고리를 꿈꾼다고 한다. 서울과 원주를 거쳐 남원에 활동 거점을 두고 있다.

“2002년 용정으로 의료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에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탈북 아이들 셋을 만나서 백두산에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2년 후, 중국 룡징에서 만난 세 아이들을 우연히 한국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반가움과 기쁨이 교차했지만… 아이들은 한국 사회와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한번은 아이를 좋아하던 탈북 청소년이 학교 졸업 후 어린이집에 취직했다고 기뻐했는데 ‘제가 쓰는 말이 북한말 같다’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어린이집에서 ‘어쩔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했대요. 이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topclass 2010.4월호 인터뷰 중 요약발췌) / 박상영 셋넷학교 교장

### (3) 새로운 교육의 시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네트워크학교

하자센터는 개관 이후 작업장 중심 운영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2000년 11월 ‘대안교육시범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였다. 2000년 11월 서울시는 대안교육 현장 요구 파악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게 되는데 5개 팀<sup>43)</sup>의 실무자 모임을 열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10대의 다양성<sup>44)</sup>을 확인하고 지원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서울시는 2001년 1월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확정하고, 추진 방향 및 협력 사항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민간이 함께 논의하여 2001년 4월, 3

43) 하자폴레지오, 민들레사랑방, 신림동 쉼터 우리세상, 도시속작은학교.

44) 탈학교 청소년과 학업중단청소년, 중퇴청소년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탈학교 청소년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도권 학교를 그만두거나 거부한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반면에 학업중단청소년은 ‘중도탈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곧 학업을 중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일각에서는 이 용어가 지닌 편견을 지적하기도 한다. 중퇴청소년은 비교적 중립적인 개념이다. 서울시 도시형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섞여 있다.

년간 연세대학교에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되면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가 만들어졌다.

대안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준비팀은 ‘관의 지원과 민의 기획’이 아닌 함께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민관협동체계의 원칙을 만든다. 준비팀은 탈학교 청소년 유형을 파악하여 민들레사랑방, 하자, 도시속작은학교 등 3개 학교를 시범으로 지원하고 대안교육프로그램 ‘하자대학’ 운영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안교육센터는 사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다. 하나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탈학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이나 든든한 동지 노릇을 했던 민간 대안교육 현장들을 찾아서 그들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화하고 지금 안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풀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 시설 가운데 탈학교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아 새로운 학습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 현장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sup>45)</sup>

또 하나의 사업은 이런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해 새로운 학습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백분 활용하는 ‘벽이 없는 학교(Network school)’가 그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격화, 박제화된 학습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더는 어느 특정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학습자’인 청소년이 그를 둘러싼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벽이 없

45) 이렇게 해서 2002년 1월 현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민간 현장과 청소년 시설은 모두 8곳으로, 민들레사랑방(곧 서울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간다), 도시속작은학교, 은평청소년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강북청소년수련관의 난나공연예술아카데미, 수서수련관의 디딤돌학교, 스스로넷의 미디어스쿨, 하자센터의 하자작업장학교였다.

는 학교의 그림이었다.

우리는 '벽이 없는 학교'라는 그림을 더 구체화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했다. 특히 새로운 학습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획한 것이 '네트워크실험교실'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학습자원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절실하며, 더 필요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학습자원들을 연결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학습시스템 안에서 청소년들은 얼마나 즐겁게 공부해 나가는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우리들은 많은 것이 궁금했고,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 나가는 파트너로서 여덟 명의 청소년을 만났다. (김경옥, 교사워크숍 자료집, 2002)

#### 도시형대안학교의 네트워크학교

2001년 대안교육센터 설립 이후 8개의 네트워크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학교를 발굴하고 지원을 늘려 갔다. 대부분 위기 가정의 아이들이 주를 이룬 도시형대안학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의 저임금 구조, 공모사업 지원과 후원 행사로 부족한 재정을 메워 나갔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는 네트워크학교의 규모에 따라 길잡이교사 1~2인의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 등 재정 지원을 해주며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재정 지원의 규모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형대안학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운

영되었다. 네트워크학교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재정적 지원이 아닌 파편화된 현상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힘을 얻고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유사한 학교끼리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학교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보다 풍성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센터의 연합 공동행사는 현장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행사로서 연초 교사수련회에서 한 해의 네트워크행사를 기획하고, 각 행사의 시기와 예산, 추진 주체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소위원회의 형태의 기획팀이 꾸러지면서 진행되었다.

교육 현장이 하나하나 따로 있을 땐 작지만, 네트워크로 큰 학교를 지향하면서 각 현장의 학생들이 모여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중창제와 300명 이상이 참여한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였다.

#### (4) 제도권 안에서 대안교육: 위탁대안학교의 출현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센터

위탁학교는 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이 예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의 대안교육 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2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폭력 학생이나 비행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없게 되자 그 복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의 특성화대안학교 설립과 함께 평생교육시설에서 비기숙형태의 도시형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자 각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고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2001년 1월,

서울시교육청은 부적응 학생을 위탁교육할 평생교육기관을 도시형대안위탁학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2월에 3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sup>46)</sup>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정규 고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진 학생들'을 위탁하였다.

그러나 위탁학교 교사의 경험 부족과 부족한 지원은 부실교육과 학생 이탈의 결과를 낳았고, 서울시교육청은 탈학교 아이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대안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형대안학교는 학적을 유지한 채 아이들의 소속과 교육적 책임이 원적학교에 있고, 정해진 기간만 교육 가능한 위탁 형식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 대안학교에서는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위탁학교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받아들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가 위탁학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난나학교

네트워크학교인 '난나학교(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는 뮤지컬을 중심으로 예술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적인 환경이 열악한 강북 지역에서 난나프로그램은 호응이 매우 좋았고 인근 학교의 상담과 요청이 많았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많이 왔는데 2003년부터는 인근 중학교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중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라 학력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2년은 원적학교에서, 1년은 대안학교를 가는 위탁교육을 제안해 왔고, 다른 대안학교는 다 거절했는데 우리는 수락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인데 학습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46) 성지고등학교(강서구 화곡동), 청량정보고등학교(동대문구 전농동), 한림실업고등학교(송파구 장지동).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잖아요. 문제는 이 아이들은 학습 공백이 너무 커서 검정고시도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고, 서울시교육청을 설득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탁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조혜영 난나학교 교장)

이렇게 시작한 위탁학교는 다른 어려움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한 늘푸른학교에도 적용되어 청소년이 학적을 유지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늘푸른학교는 임신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였는데, 그 당시엔 청소년이 임신하면 스스로 자퇴하거나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하였다. 임신한 청소년 중에는 아기도 낳고 학교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많았는데, 난나학교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례로 늘푸른학교가 위탁학교가 되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출산과 졸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2) 마을공동체 지향 대안학교의 등장과 운동의 전개

도시형대안학교가 공교육 학교에서 떠밀려 나온 탈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대안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면 그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공교육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로 대안교육을 지향하며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대안학교가 등장했다. 청소년 과정의 산촌형기숙학교가 1990년대 말부터 이미 등장하였는데,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터를 잡고 삶과 교육이 하나가 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서울에서도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첫 학령인 초등과정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 마을이 학교이다: 삼각산재미난학교(2004), 성미산학교(2004)<sup>47)</sup>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면서 2004년 개교한 삼각산재미난학교와 성미산학교는 학생들에게는 생태 중심의 대안교육을, 지역주민과 어른들에게는 공동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삶이 있는 마을학교와 마을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교사와 부모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지원 없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운영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함으로써 운영된다. 성미산학교는 1994년 9월 마포구 성산동 지역 주민 10여 명으로 시작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1995년에는 '날으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며 살아가던 주민들이 마포 두레생협의 설립과 성미산지킴이운동<sup>48)</sup> 경험을 토대로 생태적인 교육과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며 설립한 초·중고교 통합과정 학교이다.

성미산학교는 미소학교라는 실험학교를 한 학기 정도 운영해 본 후 2004년 9월에 개교했다. 2004년 3월 문을 연 삼각산재미난학교는 도봉, 강북의 공동육아 꿈꾸는어린이집을 기반으로 민들레출판사를 통해 학교 설립을 알리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세워진 초등대안학교이다. 설립을 주도한 그룹은 지역성을 표방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했는데 입학조건이 자동차 통학이 아닌 30분 이내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원칙을 두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47) 대안교육연대 현장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룹으로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 '아름다운마을학교'가 있다. 아름다운 마을학교는 민중신학과 '희년운동' 활동에 동의한 기독교 공동체로서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어린이집(2003), 춤추는방과후(2006), 아름다운마을학교(초등, 2008), 생동중학교(홍천) 등을 세우며 마을 교육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다.

48) 성미산에 대한 소유주의 아파트 개발과 이에 대한 서울시 배수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2년 여간 투쟁 끝에 유보시켰다.

(2) 공동체 지향의 운영 방식: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선발하는 학교

관료주의적인 공교육의 체계 비판으로 출발한 마을공동체 지향 대안학교는 학교 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리매김을 중요하게 여겼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생활적인 문제는 교사와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학교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곧 학교의 문화가 되었다. 학교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나 여행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설립의 주체이기도 했던 학부모는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운영위나 반모임 등의 구조화를 통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였다. 대안학교는 학교설명회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어떤 아이라도 함께한다는 전제가 있다.<sup>49)</sup>

하지만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서 학교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는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지식 전달의 기능을 사교육에 빼앗긴 공교육의 현실에서 특히 초등과정은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생활하고 공부하는 사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교육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교육운동을 함께 할 사람, 또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학교는 면접 등의 입학 절차에 따

49) 장애통합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에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의 관심과 수요가 무척 높았다.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리고 열악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장애아이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서 학부모를 선발하였다.

###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갈등, 성장

대안학교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는 교사와 부모, 학생 모두의 의견이 다르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문화를 지닌 대안학교에서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합의'에 이르는 방식과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의 철학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는 초창기 10여 년간 교사들은 교육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갈되고, 부모들은 재정이나 건축 등 존립의 기반을 책임지는 쪽으로 역할을 맡으며 역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대안교육과 대안교육운동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 학교의 교육이 사회에 나가서도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가? 교육이 너무 흥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대안학교의 문제 해결 방식은 대안적이어야 하지 않은가?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것은 아닌가? 대안교육이 그냥 좋은 사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대안학교 교사도 노동자이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만들어 가면서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생각과 논쟁도 있었고 좋은 해결점을 찾을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갈등이 커져서 누군가는 상처 입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학교의 틀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안학교 교사의 안식년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지역 안에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과 교육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외지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에 변화를 주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들이 원주민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을 바꾸거나 참아내야 하는 불편함이나 외지인들의 설레발로 비치며 꽤 오랜 시간 반대나 무관심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두 학교 모두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소리로 인한 소음과 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있기도 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주민들과 동화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갈등 속에서 마을살이의 지혜도 깨치게 되며 성장하기도 했다.

### (3) 의무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은 아니다

초등대안학교의 설립은 중고등대안학교의 탈학교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초등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의무취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부모도 학교장도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교육을 따르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의무교육은 반드시 공교육기관(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인가. 부모의 교육 의무는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것인가 등 의무교육 논쟁은 국가가 주도하는 의무교육에 대항하여 교육의 새로운 공공성으로 '민교육'을 주창하게 되고, 이는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의 교육, 교육기본권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학교가 이제 더는 옛날처럼 교육과 지식을 독점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공부시키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 ... 학교를 의무로 하고, 이것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일은 시대

착오적이다. ...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 자체에서 사람들 모두가 삶 전반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학습권, 배움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권리는 무시한 채 값싸고 질 낮은 국가 주도의, 아니 국가가 독점하는 형편없는 교육을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서 학교의무만 강조한다. 이제 진정한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시민의 힘으로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 ... 교육주체인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바로 이런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시민 중심의 교육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여 함께 살아갈 자라나는 세대와 함께 바람직한 삶의 앞날을 열어가는 데 있다. (정유성, 2004, <국가주의 의무교육비 판연구>, 99쪽)

**(4) 초등대안학교의 교육네트워크: 민들레, 대안교육연대 초등교사모임**

초등대안학교가 대부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교육철학과 공동체 문화를 상당 부분 이어받아 초등과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아이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고민하며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고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았다. 새로운 교육의 시도로 생태교육과 공동체교육의 지향과 함께 교실 내에 완전 통합을 위한 '장애아동통합교육'을 시행하였고, 산행, 텃밭 운영, 10일 안팎의 긴 여행,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학 등의 대안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와 서로 평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독려하였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대안교육을 개발하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 서울경기권역

의 초등대안학교 교사들이 모여 각 학교의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방법 교류와 정기적인 연수를 준비하며 교육의 틀을 잡아갔다. 주된 회의 장소는 민들레출판사였는데,<sup>50)</sup> 민들레는 출판물 통해 대안교육 이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교육 현장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3) 대안교육연구와 보급**

**(1) 한겨레교육문화센터 교사양성 과정과 대안교육센터 교사아카데미**

1997년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 이후, 전국적으로 대안교육 현장은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홈스쿨러의 부모나 방과후 교사 등 대안교육과 관련해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에 대안교육 확장을 심화하고 전수할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학교로 구성되어 있던 대안학교협의회는 한겨레교육문화센터와 함께 '한겨레 대안교육 준비과정'을 개설했다. 기수별 20명씩 1999년 12월 첫 대안학교 교사준비 교육 과정을 열고 2004년까지 총 10기 수료자를 배출하였다(2002년부터는 대안교육 연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운영되었다).

강의의 주내용은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부터 시작해 다양한 대안교육 실천가들의 현장 실천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1기부터 시작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장 많은 교사를 배출한 교사교육 과정이고 이후 교사양성 과정의 모델이 되었다.

50)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네트워크 현장은 중고등학교인 도시형대안학교가 중심이었고 초등대안학교들은 공동육아나 민들레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중·고교과정인 성미산학교의 경우에도 2008년 네트워크 현장이 되고, 삼각산제미난학교는 2012년에 가입했다. 초등대안학교는 경기권역에 많이 있었다.

▲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대안교육 교사양성 과정(2000년 9월 총16강)

1.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이종태)
2.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이종태)
3. 좋은학교의 교육철학·문화비교연구(이기범)
4. 교사가 지녀야 할 품성(김희동)
5. '자연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되는 교육(윤구병)
6. 몸을 쓰는 교육(송순재)
7. 생명체교육에 대하여(이병철, 귀농운동본부)
8. 청소년 문화담론(정유성)
9. 청소년 문화세계의 이해(이광호)
10.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향하여: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11. 부적응학생의 생활지도 사례(곽종문 영산성지고등학교 교감)
12. 향기의 열쇠 마음공부(박영훈 원경고 교감)
13. 새로운 문화를 위한 노력 '간디학교'(양희규)
14. 도시속작은학교(한국청소년재단)
15. 가정학교운동의 동향과 전망(박형규 작은누리 대표)
16. 두레자연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이야기
17. 안산들꽃피는학교(김현수, 예수가정)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네트워크 현장의 교육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매년 교사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IDEC 참가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도시형 대안학교에 맞는 교사양성, 재교육 과정인 '교사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과정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집중과정),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의 구성은 도시

형대안학교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었던 프로젝트 교육과 인턴십 부분을 포함해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 서울시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사연수 내용

2001~2003년	2004~2006년	2007~2009년
교사워크숍 7회(169명 참여) 교사수련회(60여 명 참여) 교사교육: 해외사례 연구 워크숍 문화예술워크숍 성교육간담회 및 관계 맺기 미디어 워크숍 인턴십 프로젝트 워크숍 커리큘럼 개발 주요교사 학습모임 등	교사교육 2004 IDEC 참가 교사아카데미 입문과정(7강) 교사아카데미 심화과정(4강) 교사자기개발프로젝트 현장연구세미나 수업연구워크숍 전문가방문워크숍 교사성장을 위한 특강 상담능력워크숍 길잡이교사수련회 등	대안교육센터 콜로키움 대안교육연구모임 교사아카데미-맞춤형 과정 수업연구모임( 입문과정, 심화과정, 집중과정) 길잡이교사수련회 상담사례연구모임 인턴십사례연구 창의미션특강기획모임 길잡이교사 커뮤니티모임 교사포럼 개최

이 교육과정은 2008년까지 지속되며 배움과 연대를 지속하고 싶은 길잡이교사들의 소모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고 자발적인 학습모임은 교사연구공모 프로젝트인 '대안학교 운영 및 대안학습 모델의 실천적 사례연구'에서 집약되어 교사들의 학습력과 교육력을 더욱 높이는 동기가 되었다. 대안교육학습모임으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연구모임과 수업연구모임이 있었다.

2007년에는 대안교육담론화와 대안교육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등을 짚어보는 콜로키움을 열었는데, 대안학교 학생성장연구, 해외이동학습연구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활동가들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해외 대안교육의 소개와 적용

제2회 대안교육센터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빅픽처컴퍼니와 매트스쿨을 소개하고 있는데, 빅픽처컴퍼니에서 제시하는 학습원리의 핵심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학교 밖 현실세계 및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중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에 근거한 맞춤형 학습, 실제적인 일을 통한 학습이 네트워크학교가 내용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라고 보았다.<sup>51)</sup>

센터장인 조한혜정은 도시형 대안학교의 작은 규모에서 시도로 교육을 바꿔내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 작은 규모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점차 확장되고 있는 매트스쿨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육에도 변화를 주고 도시형대안학교의 대안적인 내용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교사연수를 통해 현장교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 ▲ 프로젝트 학습과 인턴십

물적 기반이 취약한 작은 도시형 학교에서 학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프로젝트 학습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매트스쿨의 주된 교육활동으로서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의 교육'이며 '결과의 교육'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개발에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곧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인턴십을 교육과정으로 두었다.

51) 빅픽처컴퍼니는 미국의 공교육 개혁과 학교운영원리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이사회에는 학자, 교육행정가, 경제전문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직업교육과 지식교육으로 양분된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프레네교육, 기노쿠니학교, 올버니프리스쿨

2005년 성장학교별은 셀레스텝 프레네의 교육관을 학교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프레네교육철학을 연구하고 프레네 활동가를 초청하여 국내 연수를 개최하였다. 셀레스텝 프레네는 공교육이 죽은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아동의 욕구와 어른의 욕구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아동의 작업이 주도하는 학습기술과 도구,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학교인쇄작업, 자유로운 글쓰기, 자가수정카드, 학교신문, 작업계획서 등 일과 협동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방법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프레네 교육을 하는 현장 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성장학교 별'이 한국의 현장을 대표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과정으로 국내 초등대안학교에 큰 영향을 끼친 기노쿠니학교는 일본의 사립학교이다. 기노쿠니학교(교장 호리)는 서머힐학교의 창시자 닐의 아동의 자유와 감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아동의 호기심과 내적 동기에 따라 끈기 있게 함께 작업해 가는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버니프리스쿨은 1969년 뉴욕주 올버니시에 세워진 대안학교로, 올버니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교이다. 자유로운 수업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맺기를 중요시한다. 올버니프리스쿨의 교장인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대안교육센터, 서울시교육청, 민들레 등에서 여러 번 초빙하여 교육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기다림과 존중을 통한 올버니프리스쿨의 교육경험을 현장과 공유하였다. 국내 출판된 도서로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4) 조직적 대응을 위한 연합단체의 출현 : 대안교육연대(2002), 기독교대안학교연맹(2005)

대안교육연대는 대안교육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현장과 연구자까지 참여하는 2002년 6월에 결성된 범대안교육 연대체이다. 대안교육연대의 조직 형태는 전국 대안교육연대의회원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교육정책 연구와 교육부 대응, 교사연수와 교사교류, 대안교육한마당, 대응 등 대안교육운동의 구심과 확산 역할을 하였다.<sup>52)</sup>

김희동이 쓴 대안교육연대 창립에 부치는 글을 보면 ‘첫째, 공교육을 우리 스스로 실천한다는 민교육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겠다. 둘째, 제도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철학과 그 내용을 함께 만들며 이를 실천할 이들이 교사와 학부모로 설 수 있게 힘껏 돕겠다. 셋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제도와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도록 힘쓰겠다. 넷째, 개개인과 현장에 흠어져 있는 대안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을 열어가겠다. 다섯째, 이런 활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 생태와 영성의 대안사회가 열리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적혀 있다.<sup>53)</sup>

대안교육연대는 초반부터 전국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띠었고, 근대교육과 학교 체제, 자본적 사회와 삶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육복지적 성격을 지닌 도시형대안학교와 접점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교육부에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대안교육연대를 통해 지원했는데, 이때부터 도시형대안학교의 몇몇 현장과 함께 교류가 시작되었다.<sup>54)</sup> 2008년에는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회에 도시형대안학교 의석을 배정하여 이전에 비해 좀더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52) 초대 대안교육연대 대표는 제천간디대학교 양희창이며 사무국장은 민들레출판사 편집주간 김경옥 씨였다.

53) 2002년 10월 3일 대안교육연대 창립 자료집.

54) 삼각산제미안학교와 성미산학교는 대안교육연대 설립 초기부터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도시형학교의 현장들은 이념적인 교육운동보다는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방황하고, 사회의 위협적인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게 시급했고, 이 아이들의 어려운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면의 힘과 자립적 역량을 키워주는 게 도시형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염병훈 전 아름다운학교 교장)

대안교육의 또 다른 축인 기독교대안교육그룹은 2000년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가 설립되고 나서 이후 한국홈스쿨연맹과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2005년 1월 창립됐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교사연수, 회원현장 간 교류, 교육콘퍼런스 등을 진행하였다. 2008년까지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 가입된 서울의 현장은 여명학교(2004)와 IT기독교학교(2008)이다.<sup>55)</sup>

## 2차 법제화 대응: 초중등 교육법 60조의 3과 대안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에서는 특성화중고등학교 제도로는 증가일로에 있는 대안교육 수요(특히 초등 수준의 대안교육)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법제화를 시도하여 미인가 현장을 포섭하려고 했다.<sup>56)</sup>

55) 여명학교는 대안교육연대에도 가입되어 있다.

56)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한

대안교육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정법상 불법인 학교가 늘어나는데 부담이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1998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특성화대안학교를 제도화했듯이 미인가 대안학교도 제도화하려고 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초등대안학교의 설립은 의무교육 위반이라는 실정법상 불법임에도 확산 상황의 저지나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대안학교)을 발의하여 입법화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안교육연대는 현장들과 소통하며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조항에 명시된 ‘대안교육’은 대안교육현장이 지향하고 실천해 온 진정한 교육적 함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세칭 실천이 담보된 ‘대안교육’과 법적인 용어의 ‘대안교육’에 대한 용어의 혼란이 있다. ②필수 교육과정 규정과 교사자격증 보유자의 배치 조항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이다. ③인가가 되어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실익이 없고 설립 조건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장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은 이 정책을 거부하였고 우리가 바라는 제도화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V. 서울 지역 대안교육운동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서울 지역의 대안교육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지향점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차이에 따라 이원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와 학교 현장들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를 인식하면서 두 운동 진영은 서로 만나고 같은 이슈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대체인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를 결성하고 정책 제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형 대안학교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4장에서는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가 결성되고 정책 제안을 시작하는 시기까지를 변화와 성찰의 시기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되고 서울형 대안학교가 시행되는 새로운 모색과 제도화하는 시기로 각각 구분하여 각 시기의 대안교육운동의 이슈와 조직적인 대응 방식 그리고 그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 1. 변화와 성찰의 시기(2009~2014년)

2010년대가 되면서 도시형대안학교에 들어오는 청소년의 유형 중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증가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현장의 교실에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학생의 마찰, 교육과정 수행의 어려움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초등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포함해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도시형

대안학교에 유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어져서 교사들의 부담도 커졌다. 즉, 강남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기초 수급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학업능력이 좋은 아이와 느린 학습자가 같은 교실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에 따라 도시형대안학교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교육위기 저소득 청소년의 회복과 지원이라는 보편적인 대안교육으로서 방향성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에 불어 닥친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로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러한 경제위기 여파와 함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한 자동화를 통한 산업의 변화는 노동과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식과 직업의 생성과 소멸되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수평적, 수직적 이동 그리고 배움과 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미 지역과 공간을 넘고 동일 연령이 아닌 선호와 취향, 일의 방식과 수준으로 배움의 단위가 편재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초기부터 진로교육의 대안을 만들고 실제적인 삶의 자립으로 이어가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던 도시형대안학교에도 좀더 구체적인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자 교육체계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대안학교의 철학과도 잘 맞아서 자립과 진로과정으로서 연계를 시도하였다.

대안교육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형대안학교는 대안교육연대 소속의 전국적인 현장들과 연대, 교류하며 교육기본권 운동을 포함하여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를 결성하고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초중등교육법 60조의3이 통과된 이후, 대안교육 현장은 대안교육의 법제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대안교육인지, 시민의 교육 선택과 확

대를 위한 국가의 교육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대내외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 도시형대안학교는 가치 중심의 대안학교와 정책적 갈등을 겪었고 이 일로 일부 도시형대안학교 현장은 대안교육연대를 탈퇴하였다.

## 1) 새로운 교육의 시도

### (1) 묻지 마 돌봄: 징검다리 거점공간(2008)

징검다리 학습과정은 10여 년간 축적된 도시형 대안학교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공부할 상태가 되지 못해 도시형대안학교도 진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주고 단기학습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학교를 떠났거나 떠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학습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에는 서울 남부권역에 '몽담몽담', 북부권역에 '틔움'(2011년 '와락'으로 이름이 변경됨)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서부권역에 '작공'을, 동부권역에 '나도꽃'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언제라도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화상담, 거리상담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학습상담을 통해 평생 학습으로 이어지는 학습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진로 설계를 위해 탈학교 학생의 진로교육에 경험이 많은 도시형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배움을 시작하는 데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단기체험형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도보여행, 책 읽기, 자전적 글쓰기, 연극놀이, 청소년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의 연습을 할 수 있고, 배움의 준비가 된 아이들은 거점공간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시형대안학교를 소개하고 연결해 준다.

### (2) 청년과정으로 확장되는 교육과정: 자립을 위한 발판

아름다운학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이라는 이분법적 진로가 아닌 자기 삶의 유형에 맞는 제3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진로 배움터인 2014 라이프디자인플랫폼을 기획하고 2017년에는 17~24세로 확대하여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고등청년 과정 '별별랩'을 열었다. 별별랩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업장에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하며 활동의 성과는 지역장터와 지역문화축제 등을 기획하면서 공유했다.

성장학교별은 중고교과정을 마치고도 사회생활과 자립이 어려운 경계선 청년들의 자립과 교육, 작업을 위한 '청년행복학교 별'을 2010년에 열었다. 청년행복학교 별은 작업장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인문학, 관계와 정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행복학교 별에서는 아자라마카페와 청년쿠키공방, 별빛책방에서 인턴십을 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립 방식을 익혀 가도록 하고 있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후기청소년과정인 '플랜비'는 2014년 문을 열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비진학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 (3) 분화되고 특화되는 교육과정

고등과정과 청년과정으로 있던 하자작업장학교는 2013년부터 중등과정을 신

설하여 중등-고등-청년과정으로 과정을 확대했다. 중등과정 개설은 '하자'의 프로그램을 만나게 하고 싶은 시민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고 자립과 서로 돌보는 감각적인 활동은 더 일찍 중등부터 시작하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등과정은 자립과 감각을 살리는 '실과'교실, 고등과정은 탈핵의 나비문명을 견인해 내는 크리킨디학교, 청년과정은 지역에너지자립과 적정기술협동조합 등 청년장인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요리학교 '영셰프'는 '오가니제이션 요리(ORGANIZATION YORI)'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요리 전문 대안학교이다.<sup>57)</sup>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2011년 홍대 앞 커뮤니티 밥집 '카페슬로비'를 오픈하면서 2012년 도시형대안학교가 되었다.<sup>58)</sup> 요리라는 특성화된 작업으로 매장(제주 로컬푸드레스토랑 청년도시락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교육을 함께하는 영셰프는 슬로푸드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청소년 교육이 접목된 요리학교이다.

사회적기업 트러블러스맵<sup>59)</sup>에서 운영하는 '로드스폴라'는 2009년 처음 진안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제주, 연해주, 러시아 등을 여행하면서 역사, 환경, 그 지역 문제 등을 함께 공부하며 매년 기수를 배출하고 있는 여행학교이다. 청년·청소년 교육과 대안여행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하는 데 교육의 목표가 있다.

57)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요리를 통한 청소년,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안전한 먹거리로 요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세상에 이로운 문화를 만드는 요리, 사람, 문화가 있는 공동체 회사이다.

58) 2007년 하자센터 '일과 요리'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창립총회를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이 된다.

59) 트러블러스맵은 여행협동조합으로 지역과 여행자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행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이자,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 환경에는 최소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정한 여행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학령기를 넘어서는 탈북학생을 위한 ‘우리들학교’(2010)도 있다. 탈북학생들은 북한을 넘어 여러 해에 걸쳐서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령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60조3에 의한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학령기를 넘어서는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학교가 우리들학교이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하 ‘소보사’)는 2020년 ‘봄(see & spring) 배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열었다.<sup>60)</sup> 소보사의 교사와 부모들은 공교육과 특수학교의 구화 중심 교육에 반대하여 배움터에서 전 교육활동을 수화로 한다.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관계, 배움, 깨달음, 자유, 사랑... 이러한 것들은 ‘소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지만, 우리와 여러분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2020-01-26. 21:31:33)

자오나학교는 (재)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에서 2014년 문을 연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이다. 자오나학교는 임신으로 출산을 앞두거나 아기를 스스로 키우기 위해 자립하려는 14~24세의 여성을 위해 돌봄과 교육을 기속형으

60) ‘소보사’는 올해로 14년 된 비영리단체이다. 2006년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농·청소년들과 교육활동을 하며 2017년부터는 ‘반짝반짝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를 열었다.

로 운영되고 있다. 중등과정 2년, 고등과정 2년으로 진행하며 고등학교 이수자는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2년을 받을 수 있다.

#### (4)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학교는 공동육아로 다져진 지역 기반의 연대 속에서 교육을 통해 마을을 건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 201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통합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sup>61)</sup>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가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출마 전 《마을이 학교다》(2010), 《희망찾기 1, 2》(2011)라는 책에서 대안적인 삶과 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대안학교와 실천사례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도시의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델로서 성미산마을과 성미산학교를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황폐해진 교육 현장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찾아낸 ‘희망’을 소개하며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실험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일으킨 ‘대안학교’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재미나고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대안학교를 교육의 새

61) 상상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선언(2014. 11. 17). 자료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020973>

로운 모델로 내세우며 소개하고 있다. (《마을이 학교다》, 2010, 소개글에 서)

조한혜정은 《다시 마을이다》(2014)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토건 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적극적 선회를 해야 한다. 거대하고 거창한 구호의 시대를 지나, ‘관계의 소중함’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다양한 사람과 함께 모여서 노는 것이 곧 창의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창조적 공유 지대가 있는 사회 만들기. 나는 그 방법론으로 ‘작은 마을 학교’와 공동 식탁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주거를 제안한다.” … “마을은 돈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와 시간의 축적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미래의 주거 논의가 더는 집과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왜 마을과 관계의 복원이 사회적으로 필요인지 설파하고 있다.

성미산학교는 마포희망나눔(2005)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프로젝트를 결합하여 어르신들의 반찬 나눔을 하거나 교육의 이슈와 생활의 이슈를 결합한 마을 심포지엄을 열고, 마을공동체는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생활밀착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미산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은 공동출자금을 통해 성미산극장, 작은나무카페, 유기농아이스크림가게, 되살림가게 등을 운영하고 여기서 이윤 및 마을주민의 고용을 창출했다. 성미산축제, 작은음악회, 가을운동회 등 공동기금을 활용한 행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며 ‘소행주’라는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시너지효과를 주기도 했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을 했으나 규모가 작았던 삼각산재미난학교는 2004년 개교 이후 우리동네 단오잔치, 부모들이 출자하여 만든 유기농갈국수집 등을 운영했으나 본격적인 마을활동은 2011년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이라는 법인

을 만들고 2012년경부터 주민목공활동동아리인 ‘마을목수공작단’, 삼각산재미난 마을카페 등을 만들어 가며 강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 2) 교육기본권 운동과 정명운동

(1) 교육부 정책에 맞선 시위

① ‘우리 학교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없습니다.’: 교육부 교부금 명칭 변경 시위

교육부는 2006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안교육연대를 통해 소액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사업의 명칭이 ‘학업중단학생의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대안교육의 성과와 실적으로 ‘공교육 복귀율’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어서 대안교육 현장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에 대안교육연대는 공교육을 중단한 것이지 학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현장대표자회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2011년에 똑같은 공문을 보내자, 현장에서는 공문 신청 양식의 단어를 수정해서 신청을 하거나 역시 보이콧했다.<sup>62)</sup>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그 다음해인 2012년에도 같은 양식으로 학업중단학생

62) ‘2011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명인 ‘2011년 공교육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청서 양식을 일부 변경(▲‘재적학생 현황’에서 ‘입학사유’ 항목 삭제 ▲‘학생사유별 현황’에서 ‘대안교육선호’와 ‘교육소외 학업중단’의 구분 없음 ▲‘학교복귀 현황’ 항목 삭제 ▲‘공교육중단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들 기술’ 항목 추가)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이 전달되는 방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교육지원사업으로 공모를 시행했고 이를 대응하는 데서 대안교육연대 내부적으로 이견이 생기면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형 대안학교의 관점과 가치 중심형 대안학교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면서 몇몇 학교가 대안교육연대를 탈퇴했다. 이 사업은 2013년 '정규 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이 사업은 그해로 끝으로 폐지되었다.

## ②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제화 반대시위(2014)

2013년 태안사설해병대캠프사고와 2014년 세월호침몰사고의 영향으로 청소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는데 그중 미인가 대안학교에 영향을 미친 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계속 증가하자 2014년 2월 '대안교육학습자 지원'과 관련하여 대안교육연대, 기독교대안학교연맹과 함께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한국교육연구소에서 법안의 초안을 구성했는데 대안교육연대 현장이 법안의 내용 중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보였던 것은 등록제도와 미등록 시 폐쇄에 관한 조항이었다. 이에 대안교육연대에서는 반대의 뜻을 전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이고 서울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안교육연대와 교육부의 관계가 2~3년간 경색되었고,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일방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같은 현장조사와 폐쇄 조치를 취해 대안교육연대 현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행정적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 (2) 교육기본권 운동(2012)

국민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1항)라고 명시

되어 있다.<sup>63)</sup> 그러나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정리하면 교육기본권은 “모든 인간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포괄적인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대안교육연대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교육 과정상의 인권 및 학교 운영 참가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부모의 교육청구권, 학교선택권, 학교참가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자유와 전문직으로서 권리 및 정치적 자유, 노동기본권이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운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권이다. 대안교육연대는 법제화 토론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교육기본권 관련된 심포지엄을 열었다.

## ① 자전거유량단

2012년 5월 대안교육연대는 교육기본권의 당사자인 현장의 청소년들과 함께 제도 밖 청소년 스스로 배움의 권리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이 문제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자전거유량단'을 기획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로서 교육기본권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안적 교통수단의 상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제도권 교육 밖의 청소년 교육 지원 법률 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제도권 교육 밖의 교육기관에 재정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학력 인정을 주제로 가는 지역마다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63)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2년 5월 서울을 출발해 금산~산청~울산~제천을 거쳐 6월 6일 서울에서 열린 대안교육한마당에서 '제도 밖 청소년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 달 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제도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열하늬 살 윤희택이라고 합니다.

사회로의 첫걸음을 나가기 전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긴 여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대안교육연대에서 '자전거유랑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자전거유랑단은 배움의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제도 밖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전거 유랑을 통해서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여행입니다.

“제도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권리를!”이라는 큰 슬로건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며 사회 다양한 이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합니다. 또한 자전거 유랑의 결과물로 대안교육한마당 행사 자리를 통해 '제도 밖 청소년의 권리선언'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와 같이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권리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고단한 여행을 통해 배움과 진로와 삶에 대한 진지함과 끈기와 의지를 다지고 싶습니다.

자전거유랑단은 약 30만 원의 여행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소유 자전거도 필요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단란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참여하기 위한 자전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많

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2.5.10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윤희택 드림

## ② 조례 제정 운동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법이 없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노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대안적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가 생겼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가 2011년 7월에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은 2012년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sup>64)</sup>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경우, 2001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허울뿐인 조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구체적인 현장지원 등 타 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조례와 정책에 모델이 되었다.

## (3) 정명운동

2005년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이 신설되면서 '대안교육'이란 용어가 법정용어로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이라는 뜻이 비제도권에서 시도되는 모든 교육을 통칭하기도 해서 시민들에게 용어의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에 대안교육연대는 이름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월례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

64) 부천에도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2012)가 생겨났으며 수원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급식지원을 받게 되었고, 안양의 경우 비취학 의무교육 대상 아동 교육지원 조례(2012)로 학습비와 급식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명'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후 이 논의는 2년 여간 대안교육 현장의 실천을 돌아보고 전망을 모색하는 토론으로 이어져 정명운동<sup>65)</sup>이 되었다.

'2010년 월례 정명포럼'에서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 대안교육의 다양한 주제가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2011년 대안교육연대 현장의 주제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집을 배포하고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 후 취합된 의견을 정리하여 정명선언문이 만들어지고 매년 대안교육연대 정기총회를 시작할 때 함께 읽는다.

### 정명 선언문

우리는 대안교육을 하는 이들이다!

대안은 사람과 사회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빼앗기고 이기심과 무감각함으로 잊어버린 참모습을 되찾아 바로 세우는 것, 그러는 동안 새롭게 태어나고 무지와 허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대안의 참뜻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의 장에서 아이들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히 꽃피기를 바라며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길을 갈수록 뚜렷이 깨닫게 된다. 아이들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배우의 길을 가고 있음을, 배움은 단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장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특히 삶이 시작하는 가정은 가장 근본적인 배움터임을.

그러나 삶이란 얼마나 소중한가! 삶에서 솟아오른 앎이야말로 삶의 이끄는 힘이 있으며, 삶을 품은 이 사회와 우리를 기르는 자연이야말로 참된 배움터다. 자연에 가득 찬 저 생명들을 우러르고, 사회는 참다운 기초 위에 평화로울 때 우리의 배움은 진정한 것이 되리라 믿기에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깃발을 올린다. 그 깃발 아래서 우리의 과제를 본다.

**1. 철학이 살아 있게 하자.**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와 자랑스러운 철학이 삶과

배움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여전히 겉도는 것을 본다. 간절한 만큼 마음이 앞서서일 테지만 해를 거듭해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내심 원치 않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끔하게 돌아보자. 허위가 배움터와 삶터에 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배움길의 중심을 잡아줄 교육철학이 홍보책자에 갇히지 않고 모든 순간에 생생히 살아 있도록 하려면 늘 철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 우리의 철학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특정한 현실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는지도 돌아보면서 진정한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어떤 인간상을 바라는지를 손에 잡힐 듯 분명하게 그려두자. 그러나 너무 철학을 앞세우면 어깨가 딱딱해지니 웃음을 잃지 말자. 이 모두 참되고도 즐거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2. 온전한 공부가 되게 하자.** 우리의 공부가 좀더 알차기를 바란다. 자유를 핑계로 너무 느슨하고 준비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무턱대고 학교를 세우고 보던 낭만의 시대는 지나갔다. 세상을 바꾸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분과를 넘어선 전체의 안목으로 우리의 배움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발달과정이 고려된 생활 중심의 공부가 교육과정 흐름의 바탕이 되도록 하자. 그럴 때 개별성과 전체성이 고르게 살아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의 체계적인 과정이 절실하다. 부모 또한 공부를 통해 성장하는 본이 될 때 아이들은 공부란 평생에 걸친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리라. 자! 우리 이제 공부하자!

**3. 분명하게 진단하자.** 우리의 공부와 배움이 온전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에 의해서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 칭찬과 긍정 과잉으로 아이들은 자기 인식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교육과정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경쟁과 서열화의 위험과 한 인격에 대한 평가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학습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교육철학의 실현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동시에 같은 잣대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자. 고귀한 영혼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의식의 성장을 돕는 것이 평가의 참 목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고유한 존재다!

**4. 참여하고 소통하자.** 교육철학을 교육과정으로 풀어냄에 있어 교사의 역할

65) 공자가 말했던 '정명'을 단지 이름을 바꾸자는 의미를 넘어 스스로에 대한 '혁명적 성찰, 제 이름값하기'로서 정명 개념으로 가져가 보기로 하면서 대안교육연대 안에 '정명 특위'(나중에 '성찰과 전망을 위한 정명모임'으로 이름 변경)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였다.

과 책임은 크다. 그에 걸맞은 결정권 또한 따른다. 필요한 일이지는 하나 자칫 부모와 학생에 대해 일방적이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부모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학생들이 대상화되면 삶으로부터도 멀어진다. 길고 지루하더라도 합의를 끌어내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하게끔 하자. 구성원 간에 역할을 잘 나누어, 지나치거나 지쳐버리지 않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더불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제에서 학생들도 교육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풍부히 가져야 한다. 그러는 사이 자신들의 미래를 따로 또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리라.

**5. 연결하고 연대하자.** 이번 정명작업을 통해 우리의 배움터들이 장소와 이름만 달랐지 내용에서나 지향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거의 다름이 없음을 보았다. 그만큼 이 시대의 결핍과 우리의 갈망이 컸기 때문이리라. 문제는 시간, 공간, 사람, 돈, 경험들이 겹치면서 낭비가 생기고 시행착오 속에서도 공동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좀더 창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해외이동 학습이나 예체능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나아가 배움 그물 속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배움터를 열어 서로 오가는 사이에 차이에 대한 존중심과 자신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리라. 그리고 대안교육의 의도와 노력에 대해 국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와 더불어 한목소리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 속에서 국가에 대응해야 한다.

**6. 진로는 참된 길이다.** 진로는 참된 내면의 힘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실력을 길러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특히 노동에 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모두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아이들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과 권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성장하는 삶을 살자. 중고등과정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배움터 간에 공동수업을 시도하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함께 찾아가자. 이를 위해 개별 현장을 넘어선 폭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졸업 이후에도 그 동안 배운 대안적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더 큰 배움의 과정을 준비하자.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현실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춰 가도록 돕자. 그들은 우리의 미래다.

**7. 지역에서 대안을 꽃피우자.** 얇은 삶에서 생겨나고, 삶은 터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역은 삶터이자 배움터다. 그곳에 우리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것이 다 들어 있다. 지역사회의 의제를 배움터에 연결하여 더욱 살아있는 공부 가 되게 하자. 그럴 때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한 곳으로 만들 힘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크다. 아이들은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볼 테니까. 그러니 지역으로 들어가자. 그들로부터 현실을 배우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 사회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실천을 나누자.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은 더욱 대안적이어야 하리라. 음식, 에너지, 경제, 공동체, 의료, 건축, 예술과 문화, 삶의 전 영역에서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시도를 해보자. 우리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다가 잘 안 되면 썩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그나마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뜻을 펼쳐가니 말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공교육과 공적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정, 가정을 힘겹게 만드는 자본, 자본에 끌려 다니는 국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은 폭력과 왜곡된 문화에 방치된다. 배움으로부터도 버려지는 이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기본 권리를 되찾아 배움의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한다. 우리는 대안교육을 하는 이들이다.

### 3) 대안교육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2001년 도시형대안학교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대안교육센터'가 2012년 서울시학교밖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과 사업이 변경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지원, 진로지도, 사후관리,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지원센터로서 학교밖청소년 사업의 허브 역할을 목적으로 삼았다.

2011년 대안교육센터를 초기부터 설계하고 위탁했던 (사)연세대청년문화센터에서 (사)한국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대안교육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사업이 추가되면서 조직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안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학교로 초기 대안교육센터부터 함께 교육을 만들어 왔던 도시형대안학교 현장으로서는 대안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고민은 조직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 4) 서울시형대안학교협의회(2013) 결성<sup>66</sup>과 정책 제안 시작

‘급식 배제는 차별이다’ 시민토론회 주도

2011년 11월 초교 5~6학년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상급식 대상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도시형대안학교 교사모임에서는 각 학교에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이 무상급식 지원에 배제된 것은 차별적 행정임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신고하였다.

도시형대안학교 교사모임에서는 서울시에 인권포럼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9월 4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배제가 차별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어 대안학교의 운영 현실을 알리고 대안학교에 급식지원은 보편적 복지과 교육기본

66)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학교였던 도시형대안학교와 마을공동체형 대안학교인 삼각산재미난학교, 성미산학교가 공동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그 후 글에서 도시형대안학교라는 용어는 대안교육운동 초기에 사용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대안학교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마을형대안학교까지 포함된 의미로서 도시형대안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형대안학교에 급식을 지원하였다.

도시형대안학교의 교사와 부모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직접 제안하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존의 교사모임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연대체인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를 창립(2013. 10. 28.)하였다.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서울시 소재 도시형대안학교 간의 협의조직으로 서울시를 그 범위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등에 공동 대응하며 회원학교 상호 간의 교사-학생 교류, 연합행사 개최 등 연대 활동과 학교 간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구성을 보면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가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학교 중 20여 개 학교가 회원학교로 시작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같은 기관 소속 대안학교는 가입하지 않았다. 조직 구성을 보면 정책홍보분과와 교사교류분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했고 매월 정기적인 회의와 총회를 열었다. 서울시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2014년 6.4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서울시가 주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대표교사 간담회(2014. 2. 13.)를 시작으로 3월 1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2014. 2. 26.~4. 11.)과 대안교육기관 현장 방문(38개소, 43건 건의)을 통해 ①안정적 공간(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에 입주 희망) ②우선적 처우(수련관 등 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대안교육기관 우선 배려) ③보조금 지원(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확대) ④인식 개선(자치구별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 ⑤교육·행정 지원(재학생 교육 지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행정 지원) 등 현장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리하

였다.

**제도 밖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감의 정책 과제(2014 정책제안서에서 발췌)**

**(1) 다양한 교육과정을 부모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교육을 위한 실험과 시도에 대한 지원
- 학력인정을 위한 방안 연구: 민관 TFT를 구성하여 방안 마련
-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예: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
- 제도권 학교에 대안학교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제도권 교육의 붕괴는 제도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시 교육과 경쟁적 교육이 습성화되어 버린 제도권 교육은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변화를 쉽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여 년간의 대안학교 활동이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었듯이, 제도 밖에서 다양한 교육실험을 시도하는 대안학교의 활발한 활동이 제도권 내의 교육에 더 활발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권 학교에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모님들은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다가도 학력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큼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권 학교에서 어떻게든 졸업장을 받아야 이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제도권 학교에서 배움의 무력함 속에서 일탈 혹은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되는 일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밖 청소년의 배움터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실현해야 합니다. 초·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로의 인정 등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2) 제도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권리는 약 62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2010년 통계자료를 이용한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현재 네트워크 현장을 이용하는 총 학생 수 967명)

		산출 근거	금액(천 원)	비고
1	초등 교육비	5,437,000원×133명	723,121	
2	중등 교육비	6,638,000원×834명	5,536,092	
총 합 계			6,259,213	

그러나 현재 교육부로부터 비인가 대안학교나 학생 개인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2013년까지 지원되었던 비정규학교 지원금마저도 폐지되었고, 이것은 교육부가 제도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14억 7,598만 원으로 위에서 산출한 62억 5,000만 원의 23.58%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예산을 활용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지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밖 청소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과정을 선택하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도 밖 청소년들의 부모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권리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3년까지 지원되었던 비정규학교 지원금을 정규예산으로 확대 편성하고 상근 교사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자율성 부여
- 더 많은 제도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아동, 청소년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담당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
- 제도 밖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환경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공간 지원
  - :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놀이터이자 쉼터, 배움터인 복합문화공간 마련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공공시설 전부 또는 일부 무상 임대
  - 대안교육기관 교육 시설 임대비, 사용비 지원
  - 각종 청소년 시설(체육관, 연습실, 운동장 등) 사용 지원

**(3)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전환형 급식 지원**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전체 학생의 약 50%에 해당하는 약 3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본래 교육청의 교육격차해소과 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급식 대상을 초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의 특성상 통합교육과정이 많고, 나이로는 고등이지 만 학습 수준은 중등인 경우가 많은 대안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를 하여야 합니다.

**(4) 제도 밖 청소년을 교육 안정망 및 협력체제 구축**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제도 밖 청소년 교육기관 간 소통 구조 마련
  - 상담복지실 상담교사, 교육청별 프로그램 조정자(PC로 통칭함), 제도권 학교별 지역사회 전문가(지전가), 초·중·고교 교사, Wee스쿨 교사, 대안학교 교사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거점으로 제도 밖 청소년 배움 연계망 확대

**2. 새로운 모색과 제도화(2015~2020년)**

2015년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공포한 해이기도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도 안에서 대안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해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현천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에 5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청에서는 각종학교를 설립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 발효된 2015년에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대안교육연대의 경우, 대안교육 법제화만 염두에 있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고 나서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작되자 파급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나온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지자체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서울시의 경우, 여가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의한 학교밖지원센터가 생겨서 기관의 명칭과 사업, 역할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에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논의하며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펼쳐나갔다.

**1) 두 개의 학교밖지원센터와 함께**

**: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확대와 학교밖청소년지원법 제정(2015)**

서울시는 2012년 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조례를 만들고 각 자치구에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의 상위법 격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생기자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은 광역시와 지자체마다 학교밖지원센터를 두고 교육, 상담, 복지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십수년간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며 교육활동을 해온 대안교육기관이 위탁받는 게 아니라 여가부 청소년상담개발원의 산하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사업을 의뢰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된 대상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비인가학교 학생에 대해 교육부의 해석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맞다고 했고, 여가부에서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은 복지와 교육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적었고 특히 교육지원에서는 복교와 검정고시 지원이 전 부였으므로 도시형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교육

청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 여가부의 학교박지원센터로 연계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학교박지원센터에 청소년을 연계하지 않았고, 협력 관계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구에 따라 거점공간과 도시형대안학교, 꿈드림이 네트워크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곳도 있었다.

## 2) 위탁학교를 넘어 공교육의 대안적 모색: 오딧세이학교

2015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의 청소년이 ‘교육시간이 세계 최장,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입시지옥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사례를 검토했다. 그중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sup>67)</sup>를 모델로 하고 선형적 교육 경력이 있는 민간대안교육 현장과 협력해 ‘오딧세이학교(처음 사용한 명칭은 전환학교)’를 추진하는데 오딧세이학교는 고교 1학년을 자유학년제 개념으로 설정하고 신청자에 한해 1년간 대안적 교육을 경험하게 한 후 2학년부서는 소속 학교에 복귀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독도서관 내에 운영 지원센터를 확보하고 첫 오딧세이학교를

67)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덴마크에서는 1980년대 초, 전면일률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의무교육인 기초교육(1~9학년) 이후 중등교육에 들어가기 이전에 ‘스스로 선택하는 10학년’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자기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공간만들레, 꿈돌학교, 아름다운학교 등 3개 학교와 함께 시작했다(2015). 오딧세이학교의 구조는 네트워크학교와 닮았다. 네트워크학교가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오딧세이학교는 각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의 네트워크로 운영했다. 이들 3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오딧세이학교의 교육모델을 만들어 갔는데, 도시형대안학교의 축적된 대안교육 콘텐츠를 공교육의 구조에 적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sup>68)</sup> 이 오딧세이학교가 2021년에는 5개교로 늘어났다.

## 3)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네트워크 : 은평 지역사회네트워크, 관악 교육복지네트워크

지역에서는 동네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좋은 이웃이 연결될 때 큰 힘이 된다. 이런 지역네트워크의 힘은 지역을 시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은평씨앗학교는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하고 은평 지역사회의 네트워크<sup>69)</sup>에 함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탤다.

은평씨앗학교는 초반에는 10대 후반 고등과정을 포함했다가 2008년부터 중등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공동육아와 초등대안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입학

68) 오딧세이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고 진학 예정인 중3 학생 혹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입학 전년도에 학교 체험을 하고 학생이 제출한 서류(자기소개서 및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69)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는 일명 ‘은지네’로 불렸으며 2011년 당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생태보전시민모임 / 은평두레생협 / 갈현1동녹색가게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 은평동화있는어른모임 / 은평씨앗학교 / 한국여성성인전화 / 은평시민넷 / 여성주의의료생협(준) / 풍물패 터울림 / 아름다운가게연신내점, 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합지박사랑회 / 마을n도서관 / 아름다운가게연신내점 / 소리나는어린이집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20여 개 단체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해져서 기존의 단기간 자원 교사를 모아 서 하는 방식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이 같은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는 데 은평 지역사회네트워크는 큰 힘이 되었다. 씨앗학교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만나면서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을 경험하면서 상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관악 지역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지원과 돌봄을 위한 관악 교육복지네트워크<sup>70)</sup>에서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학교가 쌓아온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식과 경험을 지역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공유하였으며 공동사업으로 '청소년심야식당'을 운영하였다.

#### 4) 대안교육운동의 성과: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와 서울형 대안학교

2018년 9월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4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 방안 탐구를 위한 서울시-협의회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확대 방안 ▶2019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확대 협의(2018년 27억 원→2019년 43억 원)가 주내용이었다. 2019년 10월 서울시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4명), 징검다리 거점공간(1명), 전문가(3명), 시설관계자(2명)로 구성된 '서

70) 동작관악교육청 PC(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전문가(지역네트워크 조직), 아동복지센터와 복지관신교넷, 붕교넷, 청소년 봉사활동기관, 지역주민 중심의 교육활동가(예: 숲해설가, 동화읽기 활동가 등), 지역기관이 함께했다.

울형 대안학교협의회 TF팀'이 출범하여 10월부터는 TF팀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

2019년 4월부터 서울형 대안학교협의회 TF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9월 26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전부 개정과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학교 밖 지원조례는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을 분리하고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11월 서울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를 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 49개소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는 민간 영역에서 도시형대안학교가 시작되고 20년 만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치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46호, 2019. 9.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대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및 연계
2. 대안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협업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결
3. 대안교육기관 교사 양성 및 교육 지원
4. 대안교육기관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평가
5. 대안교육기관 조사·연구 사업
6. 대안교육기관 회계·운영 지원

7.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본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규정화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생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7346호,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서울시는 신고제로 등록된 기관 중 대안교육기관 25개소의 교사 인건비(3인×250만 원/월), 프로그램 개발비(600만 원), 친환경 급식비(초등 4,827원, 중·고등 5,610원)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운영의 자율성, 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서울형	서울형
- 교사 인건비: 7,200만 원	- 교사 인건비: 9,000만~1억 5,000만 원
-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 원	- 프로그램 개발비: 3,600만~5,400만 원
- 급식비(평균): 2,200만 원	- 급식비(평균): 2,200만 원
	- 임차료: 2,400만 원
	- 안전보장보험 가입 지원

① 교사 인건비

- 교사 인건비는 1인당 월 250만 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 탈북, 미혼부/모, 경계선장애, 소아암 청소년 대상 기관은 인건비 1명분 추가 지원

학생 수	10~20명	21~40명	41명~
총 지원(상한)	3명 (9,000만 원)	4명 (1억 2,000만 원)	5명 (1억 5,000만 원)

※ 학생 수 기준: 도시형 출석률 70% 이상, 징검다리형 출석률 40% 이상

② 프로그램 개발비(학생 수 연동)

- 운영 교과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비(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등), 장비 임대료 지원

학생 수	10~20명	21~30명	31~40명	41명~
총 지원 (상한)	3,600만 원	4,200만 원	4,800만 원	5,400만 원

③ 친환경급식비: 공교육과 동일한 친환경급식단가 지원: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④ 임차료 70%(연 상한 2,400만 원):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차료로 한정

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안교육기관 교사·학생 단체 가입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운영비의 70% 수준 지원

- 학습평등권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942만 원 수준)과 비슷하게 지원

- 현재 학생 1인당 500만 원 → 880만 원

❖ 대안학교 운영지원비 산출(20명 학생 기준)

• 현재 40% 수준(1억 원) → 70% 지원 시 1억 7,600만 원으로 7,600만 원 추가 부담

(단위: 천 원)

구 분	총 운영비	현재 지원 수준	70% 지원 시
교사인건비	115,200	72,000	96,000
교육사업비	100,000	30,000	43,800
학교운영비	36,000	0	36,000
합 계	251,200(100%)	102,000(40%)	175,800(70%)

○ 대안학교별 학생 수에 연계된 교사 인건비 차등 지원

학생 수	~15명	16~39명	40~69명	70~109명	110명~
지원 교사 수	3명	4명	5명	6명	7명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선정·운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교육기관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행정의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이다.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장으로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적인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및 목표

정량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시설 면적(초등: 3.5㎡, 중등: 7㎡ 이상)</li> <li>▸ 예 산: 전체 운영비 2억 5,000만 원 내외(등록금, 법인·단체 지원 전입금 등)</li> <li>▸ 학생 수: 최소 재학생 수(예: 5명 이상 등)</li> </ul>
정성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목표·내용의 공공성: 건전한 시민 육성</li> <li>▸ 교육과정의 유연성: 학생선택권 보장, 융·복합적 교과 운영</li> <li>▸ 교육과정의 혁신성: 사회변화를 고려, 차별화된 교육과정</li> <li>▸ 학생들의 자율·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등</li> <li>▸ 배움과 일의 연관성: 일자리 지원 체계·네트워크</li> <li>▸ 운영의 투명성·개방성: 회계 투명성, 교사관리 객관성, 컨설팅 수용의지 등</li> </ul>

2021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교형 21개, 공간형 10개 등 총 31개 기관이다.<sup>71)</sup> 우소연 서울시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대표는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시대에 맞는 대안적인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둘째, 초·중등교육법으로 막혀 있던 현장에 대해 대안교육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으며, 셋째,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민관협의회가 함께 논의한 ‘현장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2)</sup>

71) 학교형: 공간민들레, 꿈꾸는 아이들의 배움터, 꿈이름, 꿈터, 나눔스쿨, 내일새싹, 다음스쿨, 단재스쿨,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사랑의 배움터, 삼각산재미난, 서울꽃피는 배움터, 서울정릉발도르프, 성미산, 아름다운스쿨, 영세프스쿨, 우리들스쿨, 은평씨앗, 이룸스쿨, 청소년내길찾기 꿈틀, 프레네스쿨 별.

공간형 : 스쿨제프, 주, 틱옴, 켄틴스쿨, 작공, 도깨비, 내일더하기 1318, 바라지, 꿈꾸는 다락방, 몽담몽담

72)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2021.09.10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의 제정과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은 학교를 그만두면 학습권을 상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지자체에서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는 공적기관으로서 한발 더 나아가게 했으며, 십여 년간 시도된<sup>73)</sup> 대안교육기관 법제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5) 대안교육기관법, 제도화의 과제

18대 국회부터 도전한 대안교육법 법제화는 19대 김춘진, 김세연, 박혜자, 김병욱, 박찬대 의원을 거쳐 20대 국회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한국대안교육기관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법제화를 달성한 25년 대안교육운동의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안교육연대는 법제화를 지향하는 데 ‘교사가 자유로운 교육을 할 권리’,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권리’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대안학교’만 대상이 아니라 ‘대안학교의 학생을 포함한 1인 학습자(홈스쿨러)’의 학습권도 포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73) ▲18대 국회발의: 김춘진 의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9. 11. 18.), 김춘진 의원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 09. 18.) ▲19대 국회 발의: 박혜자 의무교육중단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5. 05. 08.), 김병욱 의원 대안교육진흥법안(2017. 09. 01.), 김세연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2017. 12. 08.),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2017. 12. 08.) ▲20대 국회 발의: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2020. 06. 05).

하고 있는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  
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두 기관이 함께 법제화를 준비하였으며, 다양한 형  
태의 현장을 포괄하기 위한 법제화를 논의하여 교육사에 큰 분기점을 만들어 냈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교육부(교육기획보장과), 044-203-652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  
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등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개정과 관련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

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의 가장 큰 의미는 초중등교육법에 틈을 낸 데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을 주도하였던 차영희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아주 단순하다. 현재 미법 상태인 비인가 대안학교를 등록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대안 교육기관 ○○학교’라고 쓸 수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이다.

이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다른 또 하나의 교육법이다. 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이외에 다른 형태의 교육 선택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 아래서 교육의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74)</sup>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75)</sup>고 하였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은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이기도 하다. 조례의 상위 법률인 대안교육기관법은 설립과 운영, 등록에 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고,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과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한 신고가 주된 내용이다.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법률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가 되고,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서울은 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76)</sup>

실제로 법률과 조례의 조정과 이를 위한 개정은 쉽지 않다.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 모양을 갖추려면 여전히 대안교육진영은 공교육 간 차별점과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입증해 내면서 대안교육력의 재생산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제도권에서 실천해 왔다면 제도화 이후에는 제도권 안에서 대안교육의 역량으로 제도를 다듬어 가야 한다.

74) 차영희,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75) 국회입법조사처,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 정책적 개선 과제(2021), 2NARS 입법·정책 제81호.  
 76)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토론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2021. 9. 4.

대안교육운동은 국가가 정한 공교육에 저항하는 철학적, 방법적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민교육(民教育)<sup>77)</sup>이라고 불렀다. 민교육이란 교육이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서도 그 내용에서 공공(公共)의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교육이라 정의했다.<sup>78)</sup> 이에 현병호(2014)는 ‘공공의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定義)하느냐 하는 지점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보았으나<sup>79)</sup> 필자는 김희동의 ‘민교육’은 시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시민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지향과 내용을 갖고 대안교육운동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sup>80)</sup> 이에 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77) 김희동은 1996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대안교육한마당에서 ‘민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  
 78) 김희동, 2001, ‘민교육,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공교육’, 민들레 14호.  
 79) 이에 대해 민들레 발행인인 현병호는 2014년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뉴스레터에서 “김희동의 정의에 덧붙일 말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공의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定義)하느냐 하는 지점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의 갈등이 대부분 정의(正義)와 또 다른 정의(正義)가 부딪히는 것이라고 볼 때, 민교육에 대한 이러한 정의(定義)는 애매한 면이 있다. ‘정의구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인간의 교육활동을 모두 민교육의 범주에 둔다면 그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민교육 담론이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면서 정체성이 선명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V 결론과 제언

서울의 대안교육운동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학교를 뛰쳐나오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도권 바깥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던 야학운동, 공부방운동으로부터 그 정신과 교육 내용을 이어받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열린 정치 공간 속에서 개인과 생활세계의 변화를 주도했던 또 하나의 문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적 교육 실천, 공동육아그룹에서 이어진 문제의식과 실천이 구체화되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

20여 년 전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인 연세대 조한혜정은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장을 만들고 ‘유스 2020’이라는 장에서 기획한 결과물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삶을 펼칠 수 있는 ‘하자센터’로 이어졌다. 하자센터를 포함하여 서울의 각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모여 있던 작은 모임들은 서로 연결되며 상처를 준 학교를 딛고 일어설 새로운 교육을 꿈꾸기 시작했다. 유스 2020의 모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연대청년문화원<sup>81)</sup>을 통해 하자센터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위탁받고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실험과 도전, 연대를 통해 대안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sup>82)</sup>

서울시는 학교중심적인 사고와 초중등교육법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교육부와 달리 선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2001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의 각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대안학교들을 네트워크하

고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서울시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있던 10여 년 동안 현장이 새로운 교육의 시도와 연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된 이후에도 10년간 흔들림 없이 현장이 운영될 수 있었던 힘은 이전의 10년 동안의 대안교육 연구, 교사들의 네트워크와 조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의 멤버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작은 학교의 한계를 현장 간, 지역 간 네트워크로 돌파하고 양질의 대안교육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만들어 내며 성장해 왔다. 지방에 기속 형태로 있던 대안학교를 도시에서 시도하여 도시형대안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냈고, 이후 전일제 대안학교도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징검다리학교도 만들어 냈으며, 각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시도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의 네트워크학교를 만들어 낸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모델, 주민과 아동청소년의 삶이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와 민관 협치의 사례는 전국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례로 소개되었다.

2000년 초반과 달리 2010년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안학교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의 규모를 키우고 서울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 변경은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미 서울시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학교를 함께 운영한 도시형대안학교가 속한 법인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 운영과 영향력을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2013년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81) ‘유스 2020’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실무자로 참여하거나 계속 도움을 주었다.

82)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2002, 「왜, 지금, 청소년?-하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하나의 문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위탁법인으로서 정책 제안의 한계가 충분히 존재하고, 현장으로서도 고충을 충분히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은 이후 서울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형 대안학교가 조직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결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이전에도 교사모임은 있었다. 그러나 정관과 조직구조를 갖추지 않고 필요시 열었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정비된 조직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시절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각 현장의 실천을 공유했던 과정을 다시 재현하며 교사들의 교류와 정책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외부 지원 없이 각 현장의 교사가 자신이 속한 현장의 업무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로 장기적으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이는 교사의 역량 소진으로 이어졌다.

또한 초반 청소년수련관 내 도시형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도시형 대안학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력을 현장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견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로써 전국 연대체인 대안교육연대나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학교와 또 다른 서울 지역 기반의 새로운 연대체로서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발효된 2015년 이후 광역시 단위로 설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서울시에는 두 개의 센터가 공존했는데 시민에게는 혼동을 주기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중복되는 영역이어서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제정된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조

례에서 결여된 교육지원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조례는 이후 2020년 12월 통과되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 제도화 이후 운동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회운동은 사회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 대응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제도화가 되어도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전보다 더 분화된 운동조직이 생겨나기도 하고 제도에 포섭되어 버리기도 한다. 또한 운동 조직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분화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한다.

대안교육은 교육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학교가 국가에 종속되고 도구화된 1970~80년대 교사들의 불복종 저항으로부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분화되어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제도 밖에서 학교를 나온 청소년 곁에서 학습과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살아갈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연대하며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왔다.

제도 밖 영역에서 민간운영으로부터 출발해 제도화된 사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다. 여기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두 단체 모두 핵심적인 활동가는 교사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가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 있고, '공동육아 교사협의회'가 있다. 대안교육의 경우

학교 단위로 조직되어 대안교육연대나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등이 구성되었지만 교사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학교별로 가입되어 있지만, 현장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사협의회이기도 하다. 서울의 도시형대안학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울 수 없는 환경에서 출발했고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 운영을 다 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교사를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2013년 조직화를 시도한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은 '서울형 대안학교'로 부족하지만 대부분 반영되었다.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기관의 공공성을 인정받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제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령을 갖추고 2022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3월)와 지방선거(5월)가 있다. 정치적인 기회와 위협 속에서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도화의 과제와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공공'에 대한 의미와 프레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은 공(公)+공(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公)이 'public'의 개념이라면 공(共)은 'commonness'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공공성은 공(公)과 공(共)의 상호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公)이 더 강조되고 사람들의 관계인 '共'의 의미는 국가적 가치의 기초 위에서 소극적으로 해석되어 왔다.<sup>83)</sup> 그렇지만 서울은 지난 10년간 마을 만들기과 공공 협치를 통해 작은 공공의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하면서 공(公) < 공(共)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적 가치는 이러한 공

83) 최태현, 「공과 共의 사이에서: '작은 共'들의 공공성 가능성의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53권 제3호(2019 가을) 1~27쪽.

(共, commonness)의 의미를 중에 두고 공공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실천으로 '비인가대안학교'들이 표방한 '공공성'과 '삶을 위한 교육'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

###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정체성과 이슈가 요구된다

대안교육운동은 국가가 독점한 학교 교육의 틀을 깨고 시민들이 학습자의 삶을 중심에 둔 다양한 배움의 현장을 만들면서 교육의 확장과 사회에 영향을 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사 중심의 교육의 개념에서 일어나는 배움을 넘고,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의 시도와 진로 교육 등의 실질적인 배움 실현 등 성과를 냈다. 이 같은 대안교육의 성과는 공교육에도 영감을 불러일으켜 혁신학교의 교육적 내용의 바탕이 되었고 위탁학교,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적 실천 등을 만들어 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 공교육으로서 책무를 상기시키며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일련의 공교육 생태계 변화는 대안교육의 성과이지만 그 성과를 공교육 체계가 흡수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안교육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위기를 동반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교육생태계는 급격하게 다양해졌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도 공공지원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안교육기관이 법제화되어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소연 꿈이룸학교 교장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평가에서 '서울형대안교육기관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교육을) 운영하

는 시민의 공공성을 갖춘 학교'라고 서울형 학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성과로서 다양성과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고 새로운 교육적 정체성과 이슈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운동은 제도권 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현장을 직접 만들어 내고 틀을 세우고, 교육적 내용을 채우는 데 힘을 쏟았다.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입시 위주 교육의 숨 막히는 교육 현실에서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공간이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삶에 기반한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모델이 되었다. 이제 그 성과들이 사회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제 대안교육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교육적 전망을 제시하고 실현함으로써 다시금 이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제도권 안에서는 책무성 안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의 공익적 목적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생태적 위기의 해결 등의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한 시민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교육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제안해 본다.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법 발효 이후 공적 자본이 투입된 여가부 학교밖 지원센터 '꿈드림'은 상담과 프로그램형 단기교육, 검정고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친구랑'을 개소하면서 2021년 현재 서울시 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내용을 보면 교육수당을 포함한 교육지원과 학부모교육을 포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꿈드림이나 친구랑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등록 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건적으로 본다면 비인가 대안학교로서는 매우 불리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비인가 대안학교도 대안교육기관법이 있기 때

문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연대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상해야 한다.

## 2.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서야 한다

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활력을 찾고 자신의 배움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쌓아 왔던 교사들의 모임은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로서 평등한 교육정책을 요구하고자 2013년 서울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이하 '서도협')를 결성했다. 서도협은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 후 이 정책제안서는 향후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낸다. 제도화가 되기까지의 정치적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것<sup>84)</sup>도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의 대안교육 정책 형성에서 주체는 서울시와 서울시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그리고 중간조직인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다. 정책 형성 주체로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안밖에 없다. 현재 서울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현장을 포괄하는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협의회에 더 많은 현장이 가입해야 현장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고 교

84)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이었던 이상훈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상훈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온전한 학습권과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대안학교 지원의 타당성을 서울시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

섭력도 높아진다.

조직활동에서 몇몇 학교의 교사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교사 4~5명의 구조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사의 개별 역량 소진은 교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현재 서도협은 서울형대안학교와 함께 2세대 리더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2세대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 있다가 제도화가 된 두 개 단체가 있다.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이고 하나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빈민, 민중운동의 계열로서 1990년대에 지역공부방운동을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에 따라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되었다.<sup>85)</sup> 그 후 지역아동센터는 기관협의회를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했으나 법제화 이후 급격히 팽창한 양적인 확대(서울 400여 개 센터) 현제는 기관 주체에 따라 조직된 6개의 기관협의회가 병존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관별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준비되지 못하면 과도한 행정업무가 공공성,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어렵고, 조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상도 할 수 없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종사자의 처우, 기관의 운영 방향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추진된 다함께 돌봄의 키움센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동을 돌봐온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별도의 조직체계로 시작된 점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보육’ 중심에 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경우, 2004년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부모보육협동시설로 제도화가 되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운동은 공동육아연구원(아동발달과 보육연구)과 공동육아교사협회(교육생산과 실

85)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거부한 현장도 있다(제도화 이전 전체 공부방의 10~20% 잔류).

천)를 기반으로 사회적 보육을 위한 기관 인증 과정과 교사양성 과정과 교육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 두 기관과 대안교육 현장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도화 하는 데 포섭, 융화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획득해 가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이 두 기관의 제도화 과정의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조직적 틀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상근자가 있는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상근자는 2인 이상은 되어야 역할을 나누고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근자의 인건비 마련과 사업비를 회비로 조달하기에는 현장 규모가 너무 작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안교육연대가 서울에 있으므로 함께 고민을 나누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지지체(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교육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야만 보장받을 수 있었던 교육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배움의 공백이 생길 때,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서울시는 민간과 함께 교육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미래 관점으로 서울의 대안교육을 만들어 왔다. 2019년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로 각 현장은 한층 더 개선된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과 시행령이 갖춰지게 되면, 대안교육현장은 등록 시 교육법상 지위를 얻게 된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원하던 현장의 지원은 대안교육기관법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안교육 현장에 지원조항이 없는 대안교육기관법과 지원조

항을 두고 있는 서울시대안교육지원조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면서 2~3년 후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발효되던 2015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법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던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 법령의 수준으로 후퇴되어 개정하려고 하거나 소극적 해석을 하려는 행정 해석을 하던 지자체는 현장과 마찰이 있었고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지방자치조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풀뿌리민주정치의 실현이 그 본질이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 본질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침해될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으로 만든 조례가 정치적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딧세이학교를 통해 소수 현장의 비인가 대안학교와 좋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형대안교육협의회 같은 조직과 관계나 대응의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고해온 초·중등교육법의 틀에 맞추어 민간이 20여 년간 일구어 온 교육을 경직되게 해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대안교육은 교육청과 계약하고 진행되는 위탁학교의 대안교육과는 지향하는 방향도,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세심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4.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적 현장 멤버십

앞서 보았듯이 현장과 함께 출발한 서울시대안교육센터는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개발과 연수, 현장 간 네트워크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기관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능이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교사나 교육을 장려, 연구,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줄어들고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직접 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현재의 서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9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서울형대안교육기관의 심의를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전의 대안교육센터 역할로서 교육지원의 정체성이 더 요구된다는 판단이 선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교육감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형대안교육기관의 지원기관이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의 방점을 분명히 하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칭) 간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십보다는 멤버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칭)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매우 큰 힘을 낼 것이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현장의 실무자가 교환근무를 하거나 현장의 대표자나 협의회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전에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현장 대표자들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가동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형식화되거나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sup>86)</sup>

86) 예를 들어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는 대안교육기관자문위원회가 형식화

## 5. 신규교사 보수교육, 정기적인 포럼

대안교육의 전문성은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동기에 따라 배움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조화하고 진로와 연결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대안교육 현장을 찾는 청소년들은 시대를 앞서서 오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의 강점과 새로움을 발견하고 시도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 충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공교육의 틀도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고 학습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산업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안교육은 각 현장의 교육을 발표·공유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 개발을 위해 현장의 교육 활동을 분석하고 심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사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교사의 연수는 좀 더 큰 단위의 교사대학이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서울시 대안교육기관협의회에서는 신규교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성과를 발표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다져보는 포럼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안교육연대에서 진행하는 대안교육한마당의 형식을 서울 버전으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1. 2. 3. 4. 5항 모두를 단계적으로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1세대 교사들이 현장의 절박함을 넘어서

---

되지 않도록 '학교밖청소년자문위원회와 분리하여 필수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위원회 인적 구성을 구체화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 학부모, 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통과시켰다.

교사 대안교육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왔다. 이젠 제도권 안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며 현장의 요구와 교사·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교육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제도화라는 대안교육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제도권 안에서 대안교육이 운동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대안교육운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교사들에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 202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목록

**[징검다리거점공간]**

1. 몽담몽담 관악구 당곡길 31, 1,2층
2. 틱옴 강북구 도봉로98길 33, 지하1층
3. 내일더하기 1318 중랑구 중랑역로 142, 지하1층
4. 캔틴스쿨 마포구 월드컵북로8길 31
5. 스쿨 제프 도봉구 도봉로 955, 1층
6. 도깨비 강북구 삼각산로 104-1, 2층
7. 꿈꾸는다락방 은평구 진흥로1길 17, 지하 1층
8.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구 통일로 817, 3층
9. 바라지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10. 청소년문화공간JU 은평구 역말로 14 3층 청소년문화공간JU

**[도시형 전일제 대안교육기관]**

1. 은평씨앗스쿨 은평구 서오릉로 21, 4층
2. 아름다운스쿨 광진구 자양로 278, 대운빌딩 4층
3. 프레네스쿨별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3층

4. 내일새싹교육 양천구 월정로50길 6, 명일빌딩 2층
5. 영세프스쿨 영등포구 영신로 228-6
6. 우리들스쿨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5
7. 공간민들레 성북구 동소문로 47-15, 1층
8. 단재스쿨 송파구 오금로36길 6
9. 대안교육기관 성미산 마포구 성미산로3나길 6
10. 대안교육기관 삼각산재미난 강북구 4.19로8길 7-22
11. 사랑의 배움터 송파구 오금로49길 31, 금호빌딩 4층 401호
12. 나눔스쿨 영등포구 도신로 181, 성지빌딩 3,4층
13.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
14. 다음스쿨 서초구 마방로6길 37, 2층
15. 청소년내길찾기꿈틀 종로구 종로58길 30, 3층
16. 꿈터 강동구 진향도로33길 28
17. 꿈이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9-3, 2층
18. 꿈꾸는아이들의배움터 관악구 당곡길 31, 1~2층
19. 서울꽃피는배움터 서대문구 연희로 189-16
20. 서울정릉발도르프 성북구 보국문로 29가길 11
21. 이룸스쿨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4층

<참고문헌>

고병헌, 「한국 대안교육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논총 12(1998)

권태희, 「한국 대안교육운동 전개에 관한 일 고찰」, 2002.

김성기, 2003, 「도시형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영화, 2001, 「도시형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김희동, 1999, 「참된 삶으로 가는 교육실천들」, 『민들레』 2호, 1999.

\_\_\_\_\_, 2001, 「민교육,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공교육」, 『민들레』 14호.

김춘진 의원실, 2008,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미인가대안학교지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안교육연대 외, 2002, 대안교육연대 창립 자료집.

\_\_\_\_\_, 2005, 「대안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 2005 대안교육심포지엄 자료집.

\_\_\_\_\_, 2005) 만남과 소통-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접점찾기」 대안교육직무면수자료집.

\_\_\_\_\_, 2011, 성명서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_\_\_\_\_, 2012, 정명선언문, 대안교육연대.

대안학교협의회·한겨레교육문화센터, 2000, 「대안학교교사준비 교육과정」.

박원순 2010 「마을이 학교다」 김동소

서덕희, 2018, 「학부모운동의 변천에 관한 한 교육인류학적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2018. 21(1).

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2, 「작은학교 큰그림」, 제2차 대안교육심포지엄.

서울시, 2001 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사업 시범운영 계획 체육청소년과.

\_\_\_\_\_, 2002-2011,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계획 체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_\_\_\_\_, 2012-2019,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2019) 청소년과.

\_\_\_\_\_, 2013,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배제가 차별인가? 시민토론회 시민인권보호관.

\_\_\_\_\_, 2011, 「서울, 즐거운 학교만들기 10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10주년 자료집,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1)

\_\_\_\_\_, 2013,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 모색」, 김생환의원실 공동주최

심성보,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내일을 여는책, 1998.

송순재(Song Sun-Jae),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9.2 (2005): 33-56.

유창복, 2009, 「도시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유팔무 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이덕남·이재은, 2021,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 정책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NARS 입법·정책 제81호.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_\_\_\_\_, 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임종화, 2002,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정여진 외, 1999, 「자퇴 일기」, 민들레.

정유성, 1998,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 운동론」, 한울.

\_\_\_\_\_, 2006, 「국가주의 의무교육 비판연구: 성숙한 시민사회 새로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하여」, 『사회과학연구』 14호-2.

정태석, 2013,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 『경제와 사회』 2015 봄호 (통권 105호).

조한혜정 2014 「다시 마을이다」 김동소

-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2002, 「왜, 지금, 청소년?-하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 외,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_\_\_\_\_, 1997,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 아이들이 없다」, 또 하나의  
문화.
- 조희연 외, 2010,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 들로」, 한울.
- 차영희,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2016, 「기독교부모를 위한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 황윤옥, 2008, 「공동육아운동 제도화의 경로와 과정, 성격에 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mailto: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http://www.snpo.kr)



